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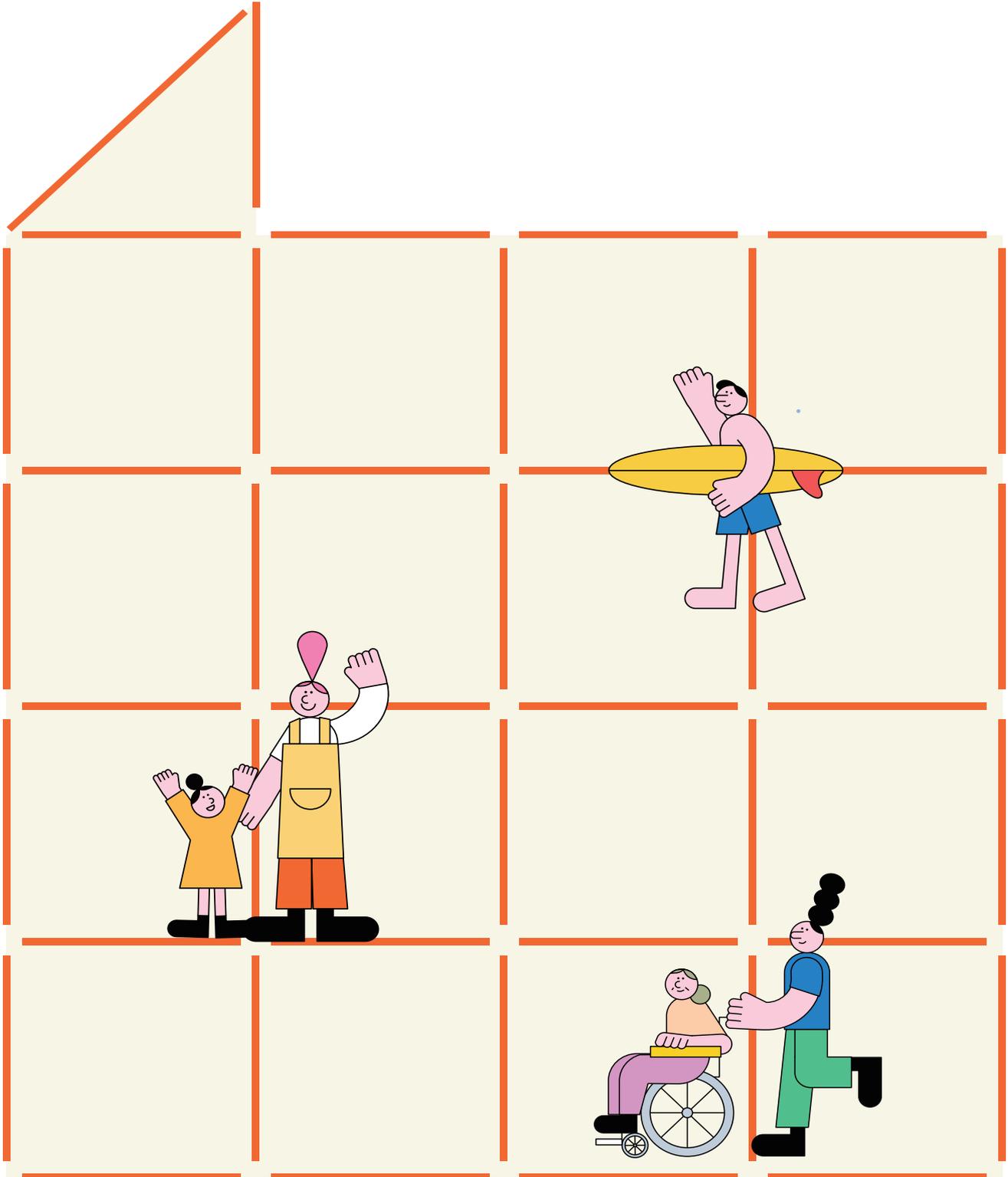
BIKN **b** 기본소득연구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No.18

2024 ㉞

기본소득

Basic Income
Magazine
Second half of 2024
No.18



펴내며	004	광기와 공통감 _이관형
연속기획:	006	복지와 보편성: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논쟁의 역사 _ 김교성
기본소득을 다시 묻다 1	011	‘모두’의 범위를 넓혀가는 일 _ 홍순영
- 보편성	015	AI 초지능의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_ 오준호
	020	기본소득의 기본원칙 1. 보편성 _ 조은석
문학	025	[소설] 씨앗은 어디에 _ 김종혁
	032	[소설] 생리대 _ 정보라
	038	[시] 2024,10,31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38-8(하제마을) 팽나무 아래에서 _ 강형철
	042	[시] 고통이 말해주지 않는 고통 _ 이문재
기본소득의 새로운 지평	043	복지국가 성과의 유형과 변화: 성장-분배-생태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 _ 이지은
기본소득의 고전	048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 소유권과 기본소득 _ 안효상
동향	054	[동향]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본소득 _ 이건민
	056	[해외동향] 2024 BIEN 대회 참관기 _ 이지은

광기와 공통감

이관형

반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장

한나 아렌트는, 정신질환이 지성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공통감(sensus communis; common sense)’의 결여라고 본다. 공통감은 공동체의 존재를 전제하며 공동체를 통해서만 발휘되고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감각(community sense)’이라고도 한다.

그는 이 말을 칸트로부터 차용한다. 칸트는 인간에게는 5개의 감각 이외에 6번째 감각(육감)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공통감이라는 것이다. 공통감은 취미판단, 즉 ‘미를 판정하는 능력’과 결부된다. 미는 주관적 감정이지만 공통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을 전달·공유할 수가 있다.

아렌트는 취미판단이 주관적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그는 공통감을 취미판단이 아니라 정치판단에 적용한다. 미학을 정치학화한다. 공통감은 ‘역지사지’를 통해 ‘불편부당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태를 전체에서 조망할 수 있는 ‘확장된 사유방식’을 제공한다. 지적인 판단능력은 전 우주의 모든 지적 생명체에게 공통적일 것이지만 공통감은 이 땅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에게만 있다. 따라서 인간이 이룩한 문화에 기반한 감각, 문화적 감각이기도 하다.

아렌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을 ‘정치적 삶’으로 본다. 정치적 삶이란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능력 중에서, 정치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통감을 중시한다.

공통감을 결여한 사람은 정치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공통감을 결여한 엘리트의 광기가 어떻게 이 나라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만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다. 이 사회는 그를 칭찬했으며, 자기 자식들도 그가 나온 바로 그 학교 그 학과를 나와, 그가 9수 끝에 합격한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거듭되는 인정과, 그 스펙 앞에 기꺼이 기가 죽는 사람들로부터 지금의 그가 탄생한다. 그는 역지사지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산다. 그는 늘 사람들보다 많은 말을 했지만 결코 제지받지 않았으며, 이런 경험의 누적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언제나 옳다는 확신을 누적해왔다. 그는 교만과 독선의 맹목에 빠진다. 아렌트의 말대로라면 그는 환자다. 학벌주의와 능력주의가 만들어 낸 괴물이다.

피와 땀. 노고와 분투로 일궈온 삶의 기반과 자긍심이 무너져 내린다. 초현실인지 비현실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된다.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겠지?” 계간에서 반년간으로 바뀐 이후 첫 번째 책이다. 기본소득의 5대 특징 중 하나인 보편성을 기획으로 다룬다. 복지, 동물권, 인공지능, 헌법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보편성 개념을 살펴본다. 문학 코너는 반년간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존재감을 드러낸다. 두 편의 짧은 소설과 두 편의 시가 마련된다. 이어 신진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기본소득 관련 고전을 소개한다. 국내의 기본소득 연구 동향을 다루었고 해외동향 코너에는 2024년 BIEN대회 참관기를 수록한다.

복지와 보편성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논쟁의 역사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회정책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할당, (급여) 형태, 전달체계, 재원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줄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진 정책도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진 정책으로 변모한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이념과 정치적 선택의 과정을 통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정책 내용의 구성과 배열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다. 이 중 ‘누구에게’라는 질문에 해당하는 요소가 사회적 ‘할당’이다. 대상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기준이 활용된다. 전자는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모든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원리이고, 후자는 일부 혹은 필요한 구성원에게 ‘만’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윤홍식·남찬섭·김교성·주은선, 2019: 325). 전자는 시민권에 기초하여 자원을 할당하고, 후자는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여 여부, 근로 여부, 자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등을 동원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을 ‘표적화’하는 방식을 ‘잔여주의’로 구분하기도 한다.¹⁾

인류는 여러 차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 양식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경험해 왔다. 그때마다 일자리 감소와 기술적 실업을 걱정해 왔다.

1) 이 글은 두 원리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논지를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기 위해 ‘잔여주의’를 사용한다.

이 우려가 현실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일자리의 질 저하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표준적 고용 관계에 기반하여 설계된 전통적 분배체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사회보장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그 과정에서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원리 혹은 ‘평등’과 ‘효율’의 가치가 충돌하며 대립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와 사회적 위험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평등한 방식의 ‘보편주의’적 접근을 지향한다. 세계화, 기술혁명, 노동시장 유연화, 불안정 노동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편주의 방식을 선호한다. 특정 인구집단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포용’적이고 ‘평등’하며 ‘차별’과 ‘낙인’으로부터 자유롭다. 반대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두터운 보장을 제공하자는 ‘잔여주의’적 주장도 존재한다. 일부에게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종 ‘낙인’이 수반된 굴욕적인 심사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데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로 취급되거나, 가짜 자격을 통해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낙인이 수치심을 갖게 하여 빈곤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게 하는 기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민의 생득적 권리인 ‘복지권’을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시각이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할당 원리가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진행 중이다.²⁾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 할당을 둘러싼 큰 논쟁이 벌어졌다. 놀랍게도 소득보장제도가 아닌 학교급식 문제가 선거의 쟁점으로 등장했다. 경기도에서 민주진영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학교급식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보수진영에 의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정치·사회적 논란이 시작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야당이 승리하면서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되었다.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이슈를 두고 민주진영의 교육감과 보수진영의 시장 간 갈등이 시작되었다. 무상급식 반대를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투표안이 부결되면서 시장이 사퇴하고, 보편적인 ‘무상급식’이 전격 도입되었다.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할당과 관련된 ‘보편주의’ 대 ‘잔여주의’의 논쟁이 부활하였다. 정부는 재난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일회성 현금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적용한 선별적 지급안이 유력했으나,³⁾ 정부가 나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가구’ 단위의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했다.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지급 대상 선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사회적

2) 역사적 논쟁과 관련된 부분은 Park and Kim(2024: 216-270)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였다.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4)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등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했다.

위험은 취약 계층에게 더 혹독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방식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등장했다. 지급 대상을 축소하고 급여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졌다. 정부는 2~4차 재난지원금을 고용 취약계층, 위기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피해가 가중되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보편 대 잔여’ 방식의 논쟁이 반복되었다. 여당은 보편적인 방식을 선호했고, 기획재정부는 선별적인 방식을 주장했다. 소득하위 80%와 소득하위 88% 기준 등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소득 하위 80%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소득 하위 88%의 기준을 두고 자의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적격자를 선정하는 (소득) 기준을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6차와 7차 재난지원금은 다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었다.

재난지원금이 촉발시킨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논쟁은 소득보장체계 개편의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정권 교체의 시기와 맞물려 대안적 보장제도의 논의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안은 ‘기본소득’과 ‘부의소득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⁵⁾ 각각 보편주의와 잔여주의의 할당 원리를 대표하고 있다. 개별 대안의 구체적인 사연과 내용을 살펴보자. 2000년대 초반, 기본소득 개념이 소개된 이후, 정치권의 관심을 촉발시킨 결정적 계기는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청년배당’이다.⁶⁾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2015)에서 이 시장은 ‘청년배당’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2016년 1월에 해당 정책을 전격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으나,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영향을 주었고, 2018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지사는 이러한 정치적 경험을 발판으로 기본소득의 지지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2022년 대선에서 전국민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다. 배당액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이며, 19~29세 청년에게는 연간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의소득세 개념을 차용한 대안은 서울시의 ‘안심소득’이다. 최근 제도의 명칭을 ‘디딤돌소득’으로 변경했다. 2022년 2월 보수진영의 오세훈 예비후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심소득을 공약했고, 같은 해 4월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며, 해당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잔여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선호해온 인물이다. 2010년 민주진영의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보편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할 당시, 이를 반대하고 사퇴한 시장이 바로 오 시장이다. 10여 년이 지난 후, 재당선된 오 시장이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를 잔여주의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정된 재

5) 부의소득세는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조세환급을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모든 구성원의 최저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점이 더 많다.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을 선별하여 가구 단위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소득조사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수반하며, 차상위계층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사전적으로 제공되는 기본소득과 달리, 사후적 처방으로 급여 지급과 관련된 시간 지연의 문제도 발생한다. 기본소득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지만, 추구하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른 선별적인 제도다.

6)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에 기초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주장한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가구소득과 기존 중위소득 85%의 차액의 50%를 지원한다. 기존에 제공하던 현금성 급여는 모두 대체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수당과 청년월세도 포함된다. 청년 개인을 위한 지원금이 가구 단위의 정책에 귀속되고 사라진 것이다. 급여 대체로 인해 수급액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존의 생계·주거급여로 90만 원을 받지만, 안심소득 대상자가 되면 8만 원이 부족한 82만 원을 받게 된다. 기존에 받던 여타의 현금성 지원이 있다면, 손해는 더 커지게 된다(한경, 2022).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점을 강조하며, 빈곤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홍보하지만, 오히려 반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브랜드는 ‘약자복지’이다.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를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층부터 정부가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잔여주의적 복지를 추구하는 보수적 접근의 전형이다. 제한된 자원의 집중을 강조하면서, ‘자격 있는 빈자’를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며, 약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를 부각시키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자산조사와 (복잡한) 신청주의가 동반되는 한, 현실에서 지속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정확한 소득과 자산 신고가 전제되어야 하고,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사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약 400만 명 규모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일반재정을 활용하여 표적화된 일부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대상과 수준의 확장에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빈곤선과 실제 소득 간 차이를 보존해 주는 ‘보충급여 방식’도 근로 의무를 저하시키고,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 수준이 낮아지게 설계되어 ‘의존성’이나 ‘빈곤의 덫’을 창출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을 추구한지도 벌써 27년이 되어 간다. 세계화와 금융 자본주의의 광풍 속에 대량실업과 근로빈곤,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등의 병폐를 숨겨왔다. 부에 대한 맹목적 찬미의 결과는 복지국가의 몰락으로 귀결되었다. 일부 보장체계의 형식적 완결과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불완전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실질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핵심 기제로 사회보험을 선택한 것도 ‘자조’의 가치를 존속하고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문제는 사회보험이 완전고용과 고용유지를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현재 임금노동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일정 기간 실업을 경험했던 시민은 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주변화’ 혹은 ‘빈곤화’ 될 수밖에 없

다. 유급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여성) 역시 피부양자의 불완전한 지위 속에 ‘간접적’ 시민 권을 향유할 뿐이다(김교성, 2017: 179). 현행 소득보장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면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구조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복지선진국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획기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 기본소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국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유사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도 존재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점은 제도 전환 비용과 막대한 자원조달 방식과 관련된다.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교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적절한 소득보장과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대가와 부담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2024년 기준 1인당 GDP는 약 3.6만 달러로 나타나, 재정적 실현가능성은 이미 충분해 보인다.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불공정하게 분배된 임금소득의 공정한 분배와 보다 평등한 재분배의 의미를 따져 보면서 세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른 문제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다. 재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복지국가의 근간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고, 사회 구성원들 간 합리적인 의견교환에 기초한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만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 중 다수는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다. 무급·돌봄노동이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일정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개인의 ‘비활동’을 독려하기보다, 오히려 자유로운 선택에 기초하여 ‘일련의 활동’을 완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Ferguson, 2017: 241). 좀 더 여유 있고 느린 삶에 대한 깊은 사유와 진실한 실천도 필요한 순간이다.

참고문헌

김교성. 2017. “외환위기 20년,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 한계.” 『한국사회정책』, 24(4)

윤홍식·남찬섭·김교성·주은선. 2019. 『사회복지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한경. 2022. “안심소득 사각지대 없다더니 수급액 깎여. 서울시 차액만큼 보전.” (2022.07.0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70331871>

Park, N. and Kim, K. 2024. “Universalism versus Residualism; A Micro-simulation of Alternative Income Maintenance Schemes in South Korea,” *Journal of Poverty and Social Justice*, 32(2)

Ferguson, J. 2017(2015). Give a Man a Fish. 조문영(역). 『분배정치의 시대』, 여문책

‘모두’의 범위를 넓혀가는 일

홍순영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위원장

“자선”이 아니라 “권리”

초등학교 시절, 종례가 끝나면 선생님은 항상 몇몇 학생의 이름을 호명하여 교무실로 불렀다.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의 이름이었다. 언제나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망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던 그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

그로부터 몇 해 뒤, 무상급식이 도입되었다. 모멸스럽게 이름을 불릴 걱정 없는 행복한 점심시간이 이어졌다.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무상급식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잔여적 관점에 머물렀다면, 무상급식 이후에는 모두의 권리를 위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삶을 이루는 기본적인 부분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결여되거나 불쌍해서 도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매우 급진적인 관점이었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보편주의의 원칙을 잘 담고 있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의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보편성^{universality}이다. 특정 인구, 특정 계층, 특정 집단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된다는 의미이다.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지급

된다.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이었던 복지정책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단순히 ‘권리 담론’에 의해서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정당한 몫으로서 그 정당성을 더욱 확대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원천 ‘커먼즈’

기본소득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원천은 무엇인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이라고 정의하며, 기본소득의 원천이 ‘공유부’라고 밝힌다. 공유부란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모두의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햇빛, 바람, 토지, 생태환경 등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연적 공유부가 있고, 수많은 이들이 함께 만들어서 축적된 지식, 수많은 이들의 활동으로 구성된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부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듯 ‘모두의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현재의 경제체제에서는 이 ‘모두의 것’, 즉 커먼즈가 위협받고 있다. 가이 스탠딩은 저서 『공유지의 약탈』에서 공유지가 어떻게 국가와 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소수에게 독점되는지를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한다. 가이 스탠딩은 공유부가 특정 개인의 사적 자산이 아닌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모두의 것으로부터 나온 공유부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야 한다. 누구에게도 독점되어선 안 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 기본소득 형태의 공유부 배당은 공유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 기본소득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부 철학은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공유부를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에 의해 독점되는 것에 반대하며, 공유부는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유부 기본소득의 논리. 그렇다면 이 논리에서 공유부를 함께 누려야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명제에서 “모두”의 범주에는 어떤 이들이 포함되는가? 바로 ‘기본소득’이라는 화폐를 지급받는 인간 시민이다.

하지만 공유부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로 귀속될 수 없듯이, “인간”만의 것으로도 귀속될

수 없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지금의 지구는 모든 존재들의 생명 활동으로 지탱되고 있으며, 지구라는 삶의 터전에서 함께 공유지를 보존하고, 또 공유지의 재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의 주민은 지구에 대한 공통의 공유자¹⁾commoner이다.

공유부를 모두에게 함께 나눠야 한다는 원칙 속 ‘모두’의 범위에 인간뿐 아니라 모든 지구 생명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 역시 공평하게 공유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비인간 생명체를 배제한, 비인간 생명체를 고려하지 않은 공유부 배당은 진정한 의미의 보편성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모두를 절멸로 몰아넣는 지금의 시스템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인간은 지구의 생태환경을 모조리 독점해왔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자연을 약탈하며 무한 성장을 추구해 온 경제 시스템은 유례없는 기후재앙과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지구 온난화 가속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속에서 자연 공유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자연공유지를 공유하고 있던 수많은 종을 멸종에 이르게 했다. 인간을 위해 야생동물에게서 땅을 빼앗아 대규모 축산 농장을 만든 결과, 현재 인류와 인류가 소유한 가축이 전체 생물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생물다양성이 파괴되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착취 시스템 속에서 비인간 생명체들은 본연의 습성과 본능을 철저히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들을 절멸로 몰아넣고 있다. 기후위기, 인수공통감염병의 일상화 등, “자연을 거의 무릎 꿇리는 약탈자가 되었다가 이제 우리를 내쫓기 위해 포효하며 돌아온 자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²⁾

“모두의 것”을 “모든 숨탄 것들”에게

우리의 역사는 ‘자선’을 넘어 ‘권리’를 주창하며, 권리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끊임없이 넓혀왔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보편성을 확장해 온 것이다.

1) 가이 스탠딩은 공유자는 공유지에 접근할 수 있고, 생계나 생활방식을 공유지에 의존하며, 공유지의 관리, 보존, 재생산에 참여하는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넓게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 제레미 리프킨, 안진환 옮김, 『회복력 시대』, 민음사, 2022, 9.

기후재앙의 시대, 절멸의 시대, 이제는 인간 사회구성원을 넘어 지구 생명체 구성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간 역시 지구생태계에 의존하고 있는 존재이며, 인간 역시 지구 공유지와 ‘얽힌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새로운 보편주의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모두의 몫’이 무엇인지를 고민함과 동시에 우리가 빼앗은 몫이 무엇인지 역시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이어가기 위해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를 만들었다. 인간만이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양한 존재들의 목숨, 삶터, 생태환경을 파괴했던 지난 역사를 중단하고,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을 ‘기본소득 정치’를 통해 모색하고자 말이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기본소득 정치는 비단 인간들에게 공유부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기후재앙을 불러일으키며 공유지를 파괴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시스템을 전환하는 일. 다른 종과 생태계에 대한 무분별한 약탈과 파괴를 멈추는 일. 우리가 빼앗은 땅에 다양한 생명체가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일. 아마존 열대우림을 되살리는 일. 공유지를 회복하고 공유지를 모든 지구생명체들에게 되돌리는 일. 성장주의의 압력에서 벗어나 자연에 대한 약탈을 중단하고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일 역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리는 일이다.

기본소득의 정신, 보편주의의 정신이 모든 인간 존재의 존엄을 고민했듯이 기본소득 정신이 돼지, 물새, 비자림, 산호초, 강아지풀의 존엄한 삶 역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구 생명체들이 각기 다른 경이로운 특성을 잃지 않고 각자 모습대로 인간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무모하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모두’의 범위를 넓혀가는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한다.

AI 초지능의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오준호

『사명이 있는 나라』
지은이.
기본소득정책연구
소장

AI 혁신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

얼마 전 기본소득 강연 요청을 받고,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을 AI에 맡겨 보기로 했다. AI 서비스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감마Gamma를 택했다. 먼저 상세히 강연 원고를 써서 AI에 업로드하고 ‘생성’ 버튼을 눌렀다. AI는 30초도 안 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똑딱 만들었다. 결과물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했다.

AI는 원고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깔끔하게 정리했고, 내용에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 곁들였다. AI가 만든 ‘기본소득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미지가 너무 서양인 일색이기에 동양인을 포함하라고 지시하니 금방 새 이미지로 바뀌었다. 무료 버전이라 10페이지가 최대였지만 만들어진 자료에 페이지를 추가하긴 쉬웠다. 이전 강연 때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드는 스트레스는 끝이구나! (이후 다른 강연 때문에 감마 AI에 들어가니 ‘무료 이용’은 끝났다며 유료 구독을 권했다. 역시 공짜는 없다.)

‘대생성의 시대’다. 쏟아져 나오는 생성 AI 서비스를 따라가기도 벅하다. 챗지피티 포오(4-o의 o는 ‘모든 것omni’를 뜻한다)는 사용자와 끊어지지 않는 음성 대화가 가능하다. 음성 대화시 말투를 바꾸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된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냥이체'로 말해줘

“냥냥~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요즘 AI가 점점 똑똑해져서 많은 일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있
다용. 그래서 사람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냥. 기본소득이 있으면, 이런 걱정 없
이도 다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용!

이 글을 쓰기 전에도 먼저 챗지피티와 클로드3.5 소네테에 쓰려는 주제와 몇 줄의 질문을 입력했
다. AI가 제공한 개요와 샘플 원고는 좋은 참고 자료다. 요새는 자료 검색에 퍼플렉시티(perplexity) AI를
자주 쓴다. 질문하면 깔끔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챗지피티와 달리 답변의 출처인 기사 등을 함께 소개
해 준다. AI는 영상 요약도 잘한다. ‘민주당 금투세 끝장토론’ 영상이 너무 길어서 릴리스(Lily) AI에 요약
을 부탁했다. AI는 영상의 주요 구간별 핵심내용을 간추려 줬다.

최근 알게 된 놀라운 서비스는 구글이 만든 ‘노트북 엘엠(LM)’이다. 문서나 웹사이트 주소를 넣으면
AI가 그 내용으로 두 인물이 대화하는 팟캐스트를 만들어 준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내가 전에 쓴 칼럼
을 올리고 팟캐스트를 생성해 보았다. 두 남녀가 “이 글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해”, “중요한 제안이
야” 같은 대화를 영어로 주고받는데 어느 외국 방송에서 내 글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듯한 착각
마저 들었다(아직은 영어 대화만 가능하다).

나의 체험 범위는 지금 AI 혁신에서 빙산의 일각도 못 될 것이다. 이제 AI로 누구나 영상을 만들고
코딩을 한다. AI는 학생별 맞춤 학습계획과 기업별 특화된 마케팅 전략을 짜는 데 사용된다. 의료 AI는
점점 더 정확히 질병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시술 방법을 제안한다. 기상 예측 AI는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천 배 빠르게 날씨를 예측한다(엔비디아는 자체 기상 예측 AI로 1년 뒤 허리케인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생산도 코앞이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사람과
흡사하게 움직이는 AI 로봇 ‘옵티머스’를 수년 내에 대당 2,50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출시할 거라고 한
다. 그 가격이면 거의 모든 제조업 기업이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AI라는 ‘마법의 도구’와 함께 인류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길에 놓인 미래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할까? 그것이 위험한 미래라면
우리는 피해 갈 수 있을까?

‘초지능’은 우리 위험한 미래로 이끌 수 있다

오픈AI 최고경영자 샘 올트만은 2024년 9월 23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초지능이 수천 일 내 등장
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초지능 AI의 등장은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지만 “기후를
고치고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고 모든 물리학을 발견하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올 거라고 예견했다. 그

가 초지능 AI 등장을 예견한 건 처음은 아닌데, 이전엔 시가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은 것에 비해 지금은 미래를 매우 낙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의 시를 능가하는 AGI(범용인공지능), ASI(슈퍼인공지능, 곧 초지능)가 곧 등장한다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누구도 그게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정의하지 못한다. 그래서 초지능에 대한 낙관론이든 비관론이든 매우 모호하다. 나는 AI 혁신이 거듭되면 우리가 AGI나 초지능이라고 부르는 국면이 올 거라고 본다. 그러나 그 국면이 어떨지에 대해 현재의 낙관론, 비관론과는 생각이 좀 다르다.

초지능 AI에 대한 대표적인 비관론은, 의식을 갖게 된 시가 인간을 지배하려 들 거라는 우려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아무리 성능이 발전해도 ‘누굴 지배하겠다’는 욕망의 감정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감정은 생명체의 의식 활동이고 인공지능은 기계지능이기 때문이다. 초지능 스스로 ‘AI 지배자’가 되기를 꿈꾸진 않을 거란 뜻이다. 하지만 낙관론이 기대하는 것처럼 시가 인간의 번영을 이끄는 독립적 도구가 ‘저절로’ 되지도 않을 것이다. 초지능 국면에는 새로운 위험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엑스선 사진만 보고 인종을 맞추는’ AI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시는 엑스선 사진과 CT 스캔 사진만 보고 흑인과 백인을 구별해 냈다고 한다. 문제는 시가 어떻게 구별했는지 그 원리를 연구자들이 모른다는 점이다. 연구의 본래 목적은 시가 흑인의 흉부 엑스선 사진에서 병리증상을 종종 놓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거였다. 이를 위해 시에게 흑인과 백인의 엑스선 사진과 CT 사진을 대량 학습시키니, 나중에는 인종 정보를 따로 주지 않아도 90% 확률로 인종을 맞췄다. 시가 답을 내놓은 과정은 이른바 ‘블랙박스’에 감춰져 있다.

시가 이 능력을 극대화하면, 얼굴 등 간단한 신체정보만으로도 그가 미래에 암 또는 우울증에 걸리거나, 과실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시가 내놓은 예측이 맞았다는 증거가 몇 차례 확인되면 AI 예측은 신뢰를 얻게 된다. 이후로 시가 위험군으로 판정한 사람은 취업, 승진, 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추리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리플라스의 마녀』에는 주변의 물리적 정보를 종합해 미래를 예측하는 천재 주인공이 등장한다. 바람의 세기나 방향, 땅의 형태나 기울기를 근거로 몇 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견하는 것이다. AI 기술이 닿으려는 경지가 바로 이 ‘리플라스의 마녀’다. 다음의 경우를 상상해 보자. 가까운 미래에 어떤 AI 기업이 대형재해 발생을 예측했다. 하지만 기업은 시가 어떤 근거로 재해를 예측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정부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 재해가 발생해 수백,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자. 대중은 시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에 분노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혹은 사람 표정에서 범죄 의도를 읽어내는 시가 개발돼, 누군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했다고 하자. 그를 체포할 법규가 없으니 경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시의 경고대로 실제 범죄가 일어났다면 여론이 어떨까. 주식시장을 읽는 시가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을 예견했는데 정부 경제부처가 조치하지 않아 개미들이 큰돈을 잃었다면? 야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우리 당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시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자연히 모든 공공정책은 시의

판단을 ‘반드시, 최대한’ 참고해야 한다는 법이 나올 것이다. AI의 위상은 ‘초지능’으로 올라간다.

AI가 어떤 객관적인 능력치를 달성해서 초지능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AI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절대시되면 그것이 곧 초지능이다. AI의 능력이 절대시되면 이제 감히 AI의 판단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하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로 여겨질 수 있다. 어떤 계기로든 AI의 판단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순간, 모든 영역에 AI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AI로 연결되고 AI의 판단에 사회의 운영을 맡기게 되면, 그것이 AGI이고 초지능 국면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 두려워하는 모든 일이 엄청난 속도로 벌어질 수 있다. AI 자동화는 필연적으로 대량 해고를 가져오고, 사회적 불평등이 빠르게 커질 것이다. AI에 의한 감시와 사회 통제가 치안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AI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되고 복지제도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늘지만, 항의해보았자 기업주나 공무원은 AI의 결정이고 그 이유는 자기도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사회적 맥락에서 AI가 발전할 때 다다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미래다. 우리는 위험한 미래를, 모두를 위한 좋은 미래로 바꾸어야만 한다. 하지만 AI 혁신 자체를 막거나 거꾸로 돌릴 필요는 없다. AI 혁신을 가속하며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할 때 AI 혁신도 더 앞당길 수 있다.

‘AI 커먼즈’와 기본소득으로 다른 미래를 그리자

기술 발전, 특히 AI와 관련하여 서구 좌파 이론가들 사이에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입장이 대립한다. 두 입장은 기술 발전에 대한 관점 그리고 기술이 사회적 평등과 정의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최소주의자들은 기술의 발전 가능성에 회의적이고, 기술이 사회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특히 AI에 의한 완전한 자동화나 인간 노동력 대체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AI 기술의 현란한 간판 뒤에는 데이터 라벨링 같은 저임금 노동이 ‘유령노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AI 자동화’는 자본이 노동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려고 퍼트리는 과장된 선전일 뿐이며, 좌파의 역할은 노동 보호와 고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 최대주의자들은 기술 발전, 특히 AI 자동화가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고 인간 삶을 개선하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졌다고 본다. 이들은 기술이 노동 부담을 줄이고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효과적 도구이며, 나아가 사회 변혁의 무기라고 여긴다. AI 자동화는 노동시간 단축과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계기이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 자유를 선사할 수 있다. 또 최대주의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기술의 공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대주의 입장은 가속주의 accelerationism이라고도 불린다. 마르크스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밀어붙여 체제를 변혁하자고

한 것처럼, 가속주의자도 기술 발전과 사회혁신에 가속 페달을 밟아 자본주의 체제를 ‘돌파’하자고 한다. (최소주의와 최대주의에 대한 이상의 논의는 조정환 등이 공저한 『인공지능,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참고했다.)

그동안 한국 진보 진영의 주류적 입장은 최소주의에 가까웠다. 진보 진영 내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먼 미래에나 있을 일이니 기본소득은 그때 가서 논의하자라는 거였다. 지금도 진보 진영이 AI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태도는 AI 혁신을 이용해 사회를 어떻게 디자인하자는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AI 발전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 등 부작용을 감시하자는 정도의 소극적 태도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고 싶은 진보파라면 최대주의의 전망을 담대하게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최대주의가 지나친 낙관주의로 빠지는 건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사회적 조건에서 AI 혁신은 노동자에게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통제, 저임금 따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자본의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상황은 진보파가 AI 기술의 잠재력을 외면하고 그저 부작용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더 악화하기만 할 것이다. 진보파는 모두에게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AI 혁신을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 계획을 제시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한 계획의 핵심에는 ‘AI 커먼즈commons’와 ‘보편적 기본소득’이 있어야 한다. AI의 원료는 시민들이 제공하는 데이터인 만큼 AI의 공유부적 성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AI 알고리즘이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지 않도록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AI 혁신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는 에너지의 공급은 국가의 대대적 투자가 있어야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AI의 공유부적 성격,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 AI 혁신을 위한 공적 투자를 종합한 개념이 AI 커먼즈다. 그리고 커먼즈로서 AI를 발전시켜 얻는 이익의 일정한 몫은 마땅히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줘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AI 자동화를 생계 노동시간의 과감한 축소와 여가 증대로 이어지게 할 방편이자, 각자의 삶에 자유로운 기회를 꽃피게 할 수단이다. 단, 기본소득이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지금 수준이 충분히 ‘해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AI의 초지능 국면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미래를 피하고, ‘모두를 위한 AI’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모두를 위한 AI. 이것이 우리가 생성해야 하는 더 나은 미래다.

기본소득의 기본원칙 1. 보편성

조은석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 기본소득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 개인에게 무조건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보편성 Universal, 무조건성 Unconditional, 개별성 Individual, 정기성 Periodic, 현금지급성 Cash payment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기본소득의 기본원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편성이란 기본소득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구분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무조건성이란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본‘소득’은 노동에 대한 대가인 노동소득(임금)과 달리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소득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¹⁾ 노동과 소득,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사고를 배제한다.²⁾ 셋째, 개별성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가구 단위로 사회보장을 제공했던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개

1) 조권중·최상미·장동열,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서울연구원, 2017, 9쪽.

2) 홍석한,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7, 177쪽.

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정기성이란 일회성의 보조금이 아니라 월, 분기 또는 년 등의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지급을 통해 개인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금지급성이란 현물이나 서비스 이용,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무엇을 살지, 어디에 쓸지 소비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의 5대 원칙 중 하나인 보편성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회구성원의 범위와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

기본소득에서 보편성이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아무런 제한이나 배제 없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기본소득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 흔히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으로 부르기도 한다.

기본소득은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과 같이 국가로부터 일정한 현금을 지급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이 현금이든 물품이든 서비스가든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대상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있기 때문이다.³⁾ 그러나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이 사회복지국가원리의 보충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회복지국가는 사회적 곤궁과 생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되, 모든 사회적 위험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기 때문이다.⁴⁾

헌법 또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사회적 기본권의 최우선적 주체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헌법 제34조 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실현함에 있어서 최우선적 보장주체는 개인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이다.⁵⁾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다.⁶⁾ 다만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경제적 약자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약자를 구분하는

3) 이준일, “기본소득과 헌법”, 『법과 사회』, 제70호, 2022, 174쪽.

4) 계획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5, 381쪽.

5) 이준일, “기본소득의 헌법적 기초”, 기본소득 개헌 토론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주최), 2017, 8쪽; 이준일, “기본소득과 헌법”, 『법과 사회』, 제70호, 2022, 176-179쪽; 표명환, “사회복지국가의 실현과 헌법-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그 실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0권, 2013, 15쪽.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에서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한 국가 내에서도 제도적 특성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에서도 급여유형에 따라 수급권자의 자격기준⁷⁾을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국가에서 보편성은 국가가 국민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기본소득은 보편성을 특징으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⁸⁾

사회적 기본권의 최우선적 보장 주체가 경제적 약자라는 점은 명확하지만, 선별적 복지 모델만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⁹⁾ 특정한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 영역과 관련하여 경제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선별적 복지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채택할 것인지는 해당 국가의 재정적 여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국가원리는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선별적 복지를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할 수도 있다. 공공부조와 같은 제도는 그 주체를 경제적 약자로 한정하지만, 사회보장은 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그 대상으로 하며, 보편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편적인 보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우리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¹⁰⁾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그 목적과 유형에 따라 선별적 복지로 시행될 수도 있고, 보편적 복지로 시행될 수도 있으며,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¹¹⁾

3. 보편성의 한계: 사회구성원 범위의 확장 가능성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보장된다고 할 때, 그 구성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7)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면 생계급여의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퍼센트 이하, 주거급여의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 교육급여의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의료급여의 자격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8) 이준일, “기본소득과 헌법”, 『법과 사회』, 제70호, 2022, 182쪽; 장인호,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7, 316쪽

9) 이준일, “기본소득과 헌법”, 『법과 사회』, 제70호, 2022, 181쪽.

10) 정철, “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3호, 2017, 136쪽

11) 한편 사회복지국가실현에 있어서 국가의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은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한에서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의 이행은 허용되지 않는 견해로는 표명환, “사회복지국가의 실현과 헌법-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그 실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0권, 2013, 22쪽.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사회복지국가원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국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하여는 개인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하고, 개인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국가의 개입만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경우, 이 견해에 따르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즉, 기본소득을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이해할 경우,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은 국민으로 간주되지만,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의 주체에 관한 논의는 사회구성원의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는지,¹²⁾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를 인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결국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대한 한계의 논의로 이어진다.

현재 논의되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은 사회구성원의 범위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구성원’이라는 개념은 인간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며, 법적 권리의 주체도 인간에 한정되어 왔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대한 배당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면, 그 혜택이 인간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타당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생태적 관점에서도 인간이 누리고 있는 자원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 즉 자연과 다른 생명체에게도 속한 것이므로, 이를 인간만의 권리로 간주하는 태도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대한 배당을 지향한다면 자연과 인간 외의 생명체의 권리도 고려하여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인간을 넘어 생태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철학적,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재정적 부담, 사회적 합의 부족, 지급 방식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이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4. 나가며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약자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들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가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제도는 반드시 경제적 약자에게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 나아가 외국인을 포함하여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¹³⁾ 전세계적 재난이었던 코로나19는 국가, 지역, 인종, 성별, 종교,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미래에 당면할 사회문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보편화되는 시대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또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12) 헌법재판소는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다(2001. 11. 29. 99헌마494). 사회보장의 한 유형인 공공부조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가 된다.

13) 이준일, “기본소득과 헌법”, 『법과 사회』, 제70호, 2022, 183쪽.

더 나아가,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이 인간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현재의 논의는 철학적·생태학적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공유부에 대한 배당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다른 생명체까지도 사회구성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논의도 가능하다. 이는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몫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후 위기와 같은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는 모든 존재가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회구성원의 범위를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존재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비록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을 헌법적으로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사회보장에서의 상호연대의 원리가 인간을 넘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5.

이준일, “기본소득의 헌법적 기초”, 기본소득 개헌 토론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주최), 2017.

이준일, “기본소득과 헌법”, 『법과 사회』, 제70호, 2022.

장인호, “기본소득제도의 논의배경과 한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8권 제3호, 2017.

정철, “사회보장의 헌법적 실현방식”, 『세계헌법연구』, 제23권 제3호, 2017.

조권중 · 최상미 · 장동열,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연구』, 서울연구원, 2017.

표명환, “사회복지국가의 실현과 헌법-사회국가의 헌법적 의무와 그 실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50권, 2013.

홍석한, “기본소득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2017.

씨앗은 어디에

김중혁

소설가

구영대와 신상도는 30년 동안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일종의 프로젝트형 프리랜서들이라 불러야 할까. 각자 일을 하다가 큰 건수가 생기면 연락해서 힘을 합친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다. 구영대는 빈집을 귀신같이 터는 도둑이고, 신상도는 금고와 프로그램 해킹과 CCTV 전문가다. 30년 전 우연히 함께 일을 한 후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료됐고,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우정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신할 게 분명하지만, 다행히 30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배포가 작은 탓이다. 둘 다 인생 역전 한 방을 꿈꾸지 않았다. 소소하게 먹고, 적당하게 살찌고, 욕심을 내지 않으며,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원칙대로 움직였다.

“도둑 주제에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말이 되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묻겠지만, 구영대와 신상도는 위험한 곳엔 가지 않았다. 두 사람을 돕는 또 다른 파트너 ‘알프(ALF)’ 덕분이다. ‘알프’는 범죄 계획을 입력하면 위험지수를 알려준다. 범죄 대상, 장소, 경비 상태 등을 고려해서 위험지수 5퍼센트에서 95퍼센트까지 알려준다. 현장에 함께 가면 실시간 위험지수도 알려준다.

몇 년 전에 타계한 작곡가 정민수의 악보를 훔치러 갔을 때, 알프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민수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피아니스트 류지환이 미공개 악보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류지환은 은퇴한 후 시골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알프와 함께 출발했다. 휴대전화 신호도 간신히 잡히는 산골이었다.

구영대와 신상도는 작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류지환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다. 컵라면과 볶음김치를 먹으면서 버텼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류지환은 외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알프가 알려주는 위험지수는 80퍼센트였다.

“알프, 80퍼센트가 맞아?”

신상도가 물었다.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폭력과 마주쳐야 합니다.”

의자 크기 정도의 알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사람이 외출하면?”

“소형 드론을 띄워서 집주인의 동선을 파악할 겁니다. 집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마치면 위험지수는 10퍼센트 미만일 것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 알프. 구입하길 잘했다.”

“감사합니다.”

“알프,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죄책감이나 윤리 의식 같은 게 장착돼 있나? 무슨 말이냐면, 범죄인을 돕는 게 괜찮냐는 뜻이야.”

“신상도 님은 죄책감이나 윤리 의식이 장착돼 있습니까?”

“나는 장착돼 있지.”

“그렇다면 신상도 님은 어째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나한테 맞는 일이 없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소유자를 돕는 게 저의 일이니까요.”

“아이고, 로봇한테 아주 잘하는 짓이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잠을 청하던 구영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로봇 아니고 에이아이라고요.”

“그래 에이아이하고 수준 높은 대화 나누고 계시네. 도둑놈 돕는 거니까 너도 도둑놈이다 그러는 거 아냐.”

“위험지수가 5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알프가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다.

“응? 그래? 왜 50퍼센트지?”

류지환이 집 밖으로 나서고 있었다. 오토바이에 앉아 시동을 켰다. 3일 만의 외출이었다. 알프는 자신의 가슴에 들어 있던 소형 드론을 꺼내서 전원을 켰다. 류지환이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 아래로 사라졌고, 소형 드론이 그 뒤를 쫓아갔다. 구영대와 신상도는 여섯 곡의 악보를 훑칠 수 있었고,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류지환이 가지고 있던 정민수의 악보를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브로커에게 물건을 넘긴 뒤였다.

“이번에는 취소해야 되는 거 아냐? 시작하기 전부터 위험지수가 너무 높아.”

구영대가 마스터키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영대 형, 40퍼센트면 괜찮은 거야. 류지환이 살던 시골집은 들어가기도 전에 80퍼센트였잖아.”

신상도는 알프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재부팅시키는 중이었다.

“그거야 사람 사는 집이니까 그런 거고. 이번에는 사람 안 살고 컴퓨터가 보안을 담당하는 곳인데 40퍼센트면 너무 높은 거 아냐?”

“자, 재부팅 완료됐고요. 알프, 위험지수가 40퍼센트인 이유를 말해줄래?”

“위험지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과의 대면 가능성입니다. 이어서 보안 등급, 탈출 경로 확보 유무, 은폐와 엄폐 지역 개수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에덴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씨앗 은행’은 인간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탈출 경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헬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퇴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를 하자고? 너 제정신이야? 퇴로 확보가 불가능하다잖아.”

구영대가 자세를 고쳐 잡고 앉았다.

“영대 형, 내가 누구야? 응? 신상도야. 신세계의 상급 도둑 신상도라고. 계획을 다 세워놨지.”

신상도가 거드름을 피며 말했다.

“그럼 뭐, 헬기라도 불렀어?”

“헬기보다 더 대단한 걸 불렀지요.”

“그게 뭔데?”

“드론.”

“드론을 타고 빠져나온다고?”

“숲이 울창해서 드론을 띄워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 새들이 좀 위험하긴 한데, 최신형 드론 알아봤더니 충돌 회피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졌더라고.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두 사람 무게를 감당해? 아니지, 알프 무게까지?”

“알프는 알아서 빠져나올 거야.”

“알프한테 드론으로 탈출할 거란 얘기해봤어?”

“안해봤지.”

“해봐.”

“에이, 그러다 위험지수가 갑자기 오르면 어떡해.”

“그럼 작전을 취소해야지.”

“알프가 좋은 에이아이이긴 하지만 최신 정보 업데이트 기능이 조금 부족해. 요즘 드론의 어마무시한 기능을 이해 못할 거야.”

“일단 넣어봐. 안 그러면 나 이번 일 안해.”

신상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존의 작전 정보에다 드론의 정보와 최신 기능을 추가했다. 알프는 곧장 결과를 출력했다.

“위험지수는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그거 봐, 형. 괜찮다니까.”

작전 당일, 구영대와 신상도는 자동차를 타고 씨앗은행으로 향했다.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 었기 때문에 준비물이 전보다 많았다. 옷 역시 식물 패턴으로 골라 입었고, 땅을 팔 수 있는 야전 삽도 준비했다. 씨앗은행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구영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이번 일 끝내면 은퇴할까 싶어.”

“뭘 소리야. 재능을 왜 썩혀?”

신상도는 고개를 돌려 조수석에 있는 구영대를 바라보았다. 구영대는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외박하고 출장이 많은 일은 이제 힘들어. 가게 하나 차리려고.”

“무슨 가게요?”

“CCTV랑 드론 파는 가게.”

“요새 그걸 누가 가게에서 사요. 다 인터넷으로 사지.”

“물건만 파는 게 아냐. 드론 교육도 하고, CCTV 영화제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영화제요?”

“재미있지 않겠냐? CCTV 영화제. 나 요새 그런 상상하면 재미있더라.”

“형,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도둑들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나 이번 일 끝나면 손 씻는다.’ 그러고는 다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손 씻어?”

“손을 어떻게 씻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음. 그랬던가? 내가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에덴의 씨앗’으로 정원 사업이나 해볼까? ‘에덴의 씨앗’만 있으면 황폐한 땅을 살릴

수 있다잖아. 돈도 벌고, 환경도 되살리고 좋잖아.”

“그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가? 모르겠다, 내 인생. 아무튼 끝나고 생각하자.”

뒷자리에 앉은 알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영대와 신상도는 씨앗은행 근처의 공터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장비를 점검했다. 알프의 가슴에 달린 화면에는 실시간 위험지수가 표시되고 있었다. 19퍼센트와 20퍼센트를 번갈아가면서 보여주었다.

구영대는 씨앗은행의 지하 배수관을 잠입통로로 선택했다. 구형 자물쇠를 잠금장치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조가 복잡하고 열기 까다로운 자물쇠였지만 구영대는 쉽게 분해할 수 있었다. 구영대가 앞장서고 그 뒤를 신상도가 따라갔다. 맨 뒤에서 알프가 쫓아왔다. 신상도는 가끔 고개를 돌려 위험지수를 확인했다.

“현재 위치는 씨앗은행의 보안 구역 외곽입니다. 곧 주요 보안 구역에 진입합니다. 위험지수 22퍼센트로 상승했습니다.”

알프가 보고했다.

“알프, 이거 잠금 해제하려면 몇 분 걸릴 거 같아?”

신상도가 물었다.

“잠금 해제 예상 시간은 42초입니다. 현재, 외부 신호 감지됩니다. 변수 발생. 순찰 드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알프가 대답했다.

“드론? 여기 드론이 있다고?”

“1분 후에 드론과 마주칩니다. 위험지수 45퍼센트로 상승했습니다.”

“방해 신호 발사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30초 동안 드론의 통신이 차단됩니다.”

알프가 문을 열었고, 구영대가 에덴의 씨앗을 챙겼다. 신상도는 휴대전화로 드론을 대기시켰다. 1분 만에 모든 작전이 완료됐다.

“형, 우리가 해냈어요.”

신상도가 드론에 올라타면서 소리를 질렀다.

“휴, 고생했다.”

구영대가 드론에 기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드론이 날아올랐다. 드론에는 스무 개의 작은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고, 아래쪽에 구영

대와 신상도가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다. ‘호버 바이크’에다 놀이 시설인 ‘자이로드롭’ 의자를 갖다 붙인 모습이다. 바람을 막아주는 몸체가 없어서 속력을 낼수록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기 위해 목청껏 소리를 질러야 했다.

“형, 아까 깜짝 놀랐지?”

신상도는 등 뒤에 있는 구영대에게 말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질렀다.

“알프는 잘 오고 있어?”

구영대도 등 뒤에 있는 신상도에게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알프도, 잘, 오고 있냐고.”

신상도는 알프의 위치를 검색했다. 씨앗은행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드론의 방향을 쫓아오고 있었다.

“잘 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구영대는 아래를 내려보았다. 뾰뾰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래의 삶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수많은 생명체가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보이는 건 많지 않았다. 드론이 고도를 낮추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무 꼭대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녔다. 나무가 파도 같았고, 서핑 보드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구영대는 멀미가 날 것 같았다.

구영대는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에덴의 씨앗 상자를 꺼냈다. 보석 상자 정도의 크기였다. 열었더니,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에덴의 씨앗이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았다. 구영대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늘 공부를 했다. 악보를 훑치기 전에는 작곡가의 음악을 들었고, 보석을 훑칠 때는 보석의 역사를 공부했다. 이번에는 씨앗을 공부했다. 신상도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씨앗을 심어보기도 했다. 희귀 씨앗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바오밥나무와 몰로키아 씨앗을 구입했다. 시키는 대로 했지만 싹을 보지 못했다.

씨앗의 중심부에는 ‘배아(Embryo)’가 들어 있는데, ‘미니어처 생명체’라고 부른다. 이미 그 속에 줄기, 뿌리, 잎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걸 씨앗에서 끄집어내 키우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발아하기 전의 씨앗은 휴면 상태로 지내고 있다.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으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몇 년을 버틸 수도 있고, 수천 년을 버틸 수도 있다. 구영대는 그 시간들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구영대는 에덴의 씨앗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잠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드론이 덜컥거리면서 크게 흔들렸다. 작은 드론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씨앗은행에서 쫓아온 드론인 것 같았다.

“형, 속력을 좀 내야겠어.”

신상도의 말이 끝나기 전에 드론이 급발진했다. 작은 드론은 쫓아오지 못했다.

구영대의 손에 있던 씨앗이 사라졌다. 씨앗을 붙잡고 있던 손가락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던 씨앗은 보이지 않았다. 구영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숲이 빠르게 흘러갔다.

“상도야.”

구영대가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형?”

신상도가 대답했다.

“씨앗을, 떨어뜨린 것 같아.”

구영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뭐라고? 잘 안 들려.”

신상도가 소리를 질렀다.

“씨앗을, 잃어, 버렸다고.”

“뭐? 씨앗?”

“그래. 씨앗.”

“그게 무슨 말이야?”

“흔들려서, 떨어졌어.”

“왜 이제 말해. 어딘데? 드론 돌릴게.”

“저기서 어떻게 찾아.”

“그래도 가야지. 알프가 찾아낼 거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

“와, 미치겠네.”

두 사람이 머뭇거리는데 사이 드론은 계속 날아갔고, 씨앗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구영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무와 나무와 나무와 나무와 또 나무와 나무들, 그 아래에 있을 여러 발 달린 곤충과 곤충을 먹어 치우는 동물들과 동물의 배설물과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새들과 새를 쫓아가는 날카로운 발 톱 달린 동물과 이끼와 버섯과 진흙과 풀들과 그 아래에 있을 씨앗들이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끝>

생리대

정보라

소설가

“기본소득 때문에 이혼했다”고 나윤의 아버지는 말하고 다닌다. 혹은 그렇다고 한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윤이 아버지가 이혼의 과정이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전해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 나윤이 알고 있는 진실은 다르다.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생리대 때문이었다.

우리 집이 좀 이상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 해 보게 마련이다. 나윤이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된 것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였다. 나윤은 그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동네에 새로 문을 연 헬스장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이었다. 일당을 받아서 나윤은 립글로스와 생리대를 샀다. 자기 돈을 가져본 것도, 생리대를 구입해 본 것도 모두 처음이었다.

나윤은 기뻐다. 이제 수업이 끝날 때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학교 화장실의 비상 생리대를 몇 개씩 몰래 뽑아두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월경을 시작한 이래 나윤은 집에 가는 시간부터 다음날 다시 학교에 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학교 화장실 비상 생리대를 뽑아 비축해 두었다. 아이들이 뒤에서 ‘생리대 도둑’이라고 수군거리는 걸 나윤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학교 생리대를 뽑아다 모아서 파는 거 아니냐고 나윤에게 따지는 아이와 싸웠던 적도 있었다. 비상 생리대 자판기가 비어 있거나 화장실에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양호실에 가서 보건 선생님에게 손을 벌리기도 했다. 학교에 있는 생리대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양이 많은 날이나 밤에 잘 때 사용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보건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가끔 오버나이트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매달 그렇게 얻어 쓸 수는 없는 노릇

이었다.

“엄마가 안 사 주시니? 엄마한테 말씀드려.”

보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동급생과 싸웠을 때 담임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다.

나윤도 물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생리 정도는 참을 줄 알아야 한다며 나윤에게 생리대를 사주는 것도, 생리대 살 돈을 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가 직접 바느질을 해서 면 생리대를 만들어 주었다. 면 생리대는 속옷과 겹달아서 움직이기 불편하고 자주 썩고 아무리 빨아도 핏자국이 잘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일어났을 때 의자에 선명하게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핏자국을 나윤도 보았고, 나윤의 옆자리와 뒷자리, 이어서 앞자리에 있던 아이들도 보았다. 그 뒤로 나윤은 어머니가 만들어준 면 생리대를 집 밖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나윤이 처음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 립글로스와 생리대를 구입한 다음 날 아버지가 나윤의 방에 들어와 가방을 뒤집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가방 속에 들어 있는 일회용 대형 생리대와 립글로스를 꺼내 방바닥에 늘어놓았다. 아버지는 때리지 않았다. 폭력은 야만의 발현이라고 아버지는 언제나 말했다. ‘대화’를 하자며 아버지는 나윤에게 립글로스 앞 방바닥에 앉으라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치와 향락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며 어린 시절부터 사치에 물든 사람이 자라면 어떤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지 오랫동안 설명했다. 몇 시간이나 설명한 끝에 아버지는 나윤에게 직접 립글로스와 생리대를 휴지통에 버리라고 명령했다.

나윤이 다시 헬스장에 찾아가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부탁했을 때 관장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다녀갔다고 했다.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는 없다고 관장님은 미안해하며 나윤을 내보냈다.

립글로스는 없어도 상관없었다. 생리대는 필요했다. 생리는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더운 날에 땀이 쏟아지는 걸 참을 수 없듯이, 월경혈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으니까 ‘생리’현상이었다.

“우리 집은 왜 생리대 살 돈도 없어?”

나윤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사춘기 딸에게 생리대를 사줄 수 없을 만큼 집이 가난하지 않다는 사실은 나윤도 알고 있었다. 밥을 굶거나 집에 전기나 수도가 끊어진 적은 없었다. 나윤은 평범한 집에서 살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남들이 다 하듯이 학원에 다녔고, 계절에 맞는 옷과 신발을 갖추어 입고 신었다.

다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는지에 대해 나윤은 발언권이 없었다. 어머니는 전업 주

부였고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세 식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해결했다.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부와 함께 영수증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돈 쓴 내역을 점검받는 것은 나윤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화’라고 표현했지만 나윤이 보기에 그것은 취조였다. 두부 한 모, 화장실 휴지 한 롤을 구입한 것까지 어머니는 일일이 그 필요성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자신의 지출을 정당화하고 방어해야 했다. 가끔 그 ‘대화’는 한밤중까지 이어졌다.

나윤의 동급생 중에는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나윤은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벌어도 저렇게 가게부 계산이 복잡한데 부모가 모두 돈을 버는 집은 ‘대화’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지레 끔찍하게 여겼다. 다른 집 부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수증까지 따져가며 가게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윤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어른이 혼자서 돈을 버는 집이라도 나윤의 아버지처럼 여자아이가 생리대를 사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집안의 어른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으로 아이가 무엇을 사는지 영수증을 요구하며 하나하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 아이가 자기 돈을 스스로 관리할 재량과 자유를 준다는 것, 그게 보통이라는 것 - 나윤에게는 이 모든 발견이 충격이었다.

더 큰 충격은 나윤의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이었다. 결심만 한 게 아니라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이제까지 썼던 17년치 가게부를 보여주고 한밤중까지 이어졌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다고 어머니는 나윤에게 조용히 말했다. ‘경제적 학대’가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어머니도 처음 알았다고 했다.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것만이 학대는 아니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민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배우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 배우자의 돈 씹씹이를 계속 비난하는 것, 일일이 허가를 받고 돈을 받아 가게 하는 것, 자신이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쓰는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이 모든 행위가 경제적 학대였다.

“돈이 들어왔어.”

어머니가 나윤에게 말했다.

“큰돈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이야. 기본소득이래.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준대. 이걸 네 아빠도 건드릴 수 없어. 네 아빠하고 이혼하고 이 집을 나가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나윤을 바라보며 물었다.

“나갈래?”

나윤은 대답 대신 우선 급한 사안부터 물었다.

“그럼 나도 열여덟 살이 되면 기본소득 받을 수 있어?”

“그럼, 받을 수 있지.”

어머니가 말했다.

나윤은 얼른 계산해 보았다. 삼 년 반 정도 버티면 나윤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 때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태면 된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삼 년 반만 버티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그 뒤로는 어머니가 나윤까지 먹여살리는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한테는 기본소득 들어온 거 얘기 안 했어. 그렇지만 아버지도 알 거야.”

어머니가 속삭이듯 덧붙였다.

“아버지하고 계속 살면 너도 기본소득이 들어와도 아버지한테 뺏길 수도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 세상을 휩쓸었을 때 재난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전부 지급되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지원 단위가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지급되었고 그래서 외할머니는 어머니나 삼촌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그 돈을 혼자서 다 써버렸다고 했다.

“어디다 썼는데?”

나윤이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 대답했다.

“썬글라스를 샀어.”

나윤은 말했다.

“나 엄마 따라 갈래.”

그것은 당연한 결론이었다.

두 사람은 떠났다.

어머니가 몇 달 동안 모아둔 기본소득은 방을 구해서 월세와 보증금을 내자 거의 사라졌다. 어머니가 그 다음 달 기본소득과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두 사람은 몇 주 동안 베개도 이불도 없는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패딩점퍼를 이불 삼아 덮고 잠을 자야 했다.

어머니는 첫 월급을 받은 날 나윤을 자신이 일하는 마트로 불러서 이불과 베개를 골라보라고 했다. 나윤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침구를 선택했다. 어머니는 직원 할인가로 나윤이 좋아하는 식재료를 샀다. 사는 김에 프라이팬과 뒤집개도 샀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냄비 하나로 한 달째 버티고 있었다.

“전기밥솥을 살까?”

어머니가 물었다.

“비싸지 않아?”

나윤이 걱정했다.

“크기에 따라 다르지. 집에 가서 검색해 보자.”

어머니가 말했다. 나윤은 동의했다.

어머니는 즐거워 보였다. 나윤도 행복했다.

어머니와 둘이 사는 삶은 가난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나윤도 어머니와 함께 떠날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다. 나윤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다. 나윤의 친권을 아직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려면 법정에서 한참 다투야 했고 그 변론을 맡은 변호사의 수임료는 분할해서 앞으로 갚아 나가야 했다.

그러나 매트리스 위에서 어머니와 둘이 패딩점퍼를 나눠 덮고 자도 나윤은 지금이 좋았다. 조그만 예산 안에서 어머니와 서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의논해서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 수 있었다. 어머니가 주는 용돈으로 필요한 크기의 생리대를 사고 푼돈이 남으면 싸구려 립밤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도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장을 보고 나면 영수증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서 마트 쓰레기통에 버렸다.

삼년 반만 더 버티면 나윤도 자신의 기본소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방을 구하고 전기밥솥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전에 어머니가 나윤의 친권을 가져올 수 있으면 나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이나마 스스로 벌 수 있게 될지도 몰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자유이고 존엄이었다. 자기 돈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기본소득 때문에 자신이 이혼했다고, 기본소득은 사람을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만든다고, 지인들에게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했다. 기본소득 때문에 어머니가 마약과 도박에 빠지고 나윤은 사치에 물들었다는 거짓말도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윤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사치에 물들 만큼 큰돈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전자렌지도 살 수 있는데, 하고 나윤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도 기본소득을 받고 있으니 사치나 도박에 사용할 만큼 큰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아버지 본인도 알 것이었다. 애초에 기본소득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받는 기본소득을 아버지가 굳이 빼앗지 않은 것 같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지 나윤은 알 수 없었다.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엄마 돈 받았대!

어머니가 보낸 문자메시지였다.

- 뭐 먹고 싶어, 우리 딸?

나윤은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궁리하며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끝>

2024,10,31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238-8(하제마을) 팽나무 아래에서

강형철

시인

2020년, 생장추 수령 537(±50)으로 측정된 팽나무가
국가자연유산 신규지정으로 천연기념물로 선포되던 날
팽나무 아래에는 국가유산청 높은 사람과 군산시장을 비롯
이른바 관계자들이 행사를 벌였다
이른바 높은 사람들이 축사를 하며 자랑스러워했고
'흙소리 타악공화국'의 공연이 이어지며
하제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회고가 이어진 뒤,
행사는 끝났다
서둘러 기념식장이 비워졌다

2020년 10월부터 매월 세 번째 토요일에
팽팽문화제를 마흔 여섯 번 열었던 '평화바람' 식구들은
몇 명의 하객으로 간단히 처리되었고
한 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팽나무만 천연기념물 위용으로
담담하게 미군부대 탄약고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지팡이를 짚고 선 문정현 신부님의 목소리가
팽나무 아래 공터에서 울렸다

뭐라고? 644가구 2천 여 주민들이 살기위해 떠났다고?
그 주민들이 쫓겨나간게 아니고 제 발로 떠났다고?

살던 집 부서지고 가재도구 아직도 곳곳에 파묻혀 있고
그 울음소리 원망의 소리 여전히 쟁쟁한데...
마을에 살다가 미군에게 총맞아 죽은 아버지를 그리는
70 노인이 자신의 텃자리가 여기라고 울며 울부짖고 있는데
뭐라고! 살기 위해 떠났다고...
그게 말이야!
살기 위해 떠났더니! 쫓겨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 쫓겨난거지!
그게 말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똥구멍에서 뒷목으로 철사줄이 올라왔어
나는 말을 못했어 꿈쩍도 못했다고!

분노가 쳐올라와 몸뎡이가 딱 굳어 아무말 못 했다고!

순간, 하교길에 장갑차에 깔려 죽은 동두천의 효순이 미순이가
아니 1945년 미군이 이 땅에 진주한 이후 저지른 수 많은 범죄들이
아니 계속되는 전폭기 이착륙 소리에 귀가 울려 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 이곳 옆의 수라갯벌은 물론 이른바 새만금 사업으로 죽어가고 썩어가는
뭇 생명들이 팽나무 주변으로 몰려오면서
갑자기 세상이 더더욱 캄캄해졌다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캄캄해졌다는 말을 전해주고
몇 해 전 홀연히 떠난 김종철* 선생님이 공터로 돌아오고 있었다

건물 5층 높이인 20m, 가슴 둘레 7.5m
밑둥 3m 높이에서 남북으로 넓고 균형있게
가지가 퍼져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가 양호하다는
천연기념물 580호 하제마을 팽나무는
아무 말 없었다

지금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인 주소가
SOFA협정에 의해 U.S.A 캘리포니아 사서함 몇 호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팽나무가 선 땅 몇 오름 제외하고
주변을 모두 다 미군에게 공여되어
미국의 주소지로 바뀌어 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야 간신히 오늘의 현실이 어디인지
우리들이 알기 시작했다고 격려해주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랬다!

아무말 없이
굳게 서서

당당하게 천 개의 손을 흔들며
'600년 팽나무'는 일어서고 있었다

• 김중철(1947~2020): 문학평론가. 1991년 『녹색평론』을 창간했고, 『기본소득』을 중심과제로 제창하였다.

고통이 말해주지 않는 고통

이문재

시인

고통이 말해주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무가 다 보여주지 않는 나무가 있듯이
내게도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당신이 있다
상처가 다 말하지 않는 상처가
그래서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인지 모른다
꽃이 다 보여주지 않는 꽃 어딘가에
그 꽃의 꽃다움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다 보여주지 못하는 내가 있듯이
이별에게도 이별하지 못하는 이별이 분명 있겠다
만남에게도 만나지 못하는 만남이 분명 있겠다

복지국가 성과의 유형과 변화: 성장-분배-생태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

이지은

반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반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복지국가 성과의 유형과 변화: 성장-분배-생태에 기초한 이념형 분석」 제목의 박사학위논문(2024년 8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를 성장, 분배, 생태 차원에서의 성과를 중심으로 새롭게 유형화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태적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녹색전환의 방향과 전략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위험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Gough, 2013)으로 간주되면서, 생태-사회적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15년 파리협정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C 이내로 통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2015년 UN은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제가 되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환경문제는 해당 분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시스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통합적 대응을 제시합니다. 각 차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고유한 성과원칙에 따라 작동합니다(Sabato & Mandelli, 2018). 둘째, 그러나 이 개념은 ‘의도적으로 고안된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이점이 있지만 각 영역간 목표의 관계, 그리고 지속가능한 sustainable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발전(development)의 개념이 무엇인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특징은 시스템 차원에서의 통합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비판에 직면합니다.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특히 GDP로 측정되는 경제성장 목표가 포

함되는지의 여부입니다. 가장 큰 비판은 생태경제학의 입장에 따라 ‘성장의 물질적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는 GDP 중심의 성장은 생태적 목표와 근본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사회-생태의 트릴레마’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성장과 복지의 이중성을 포괄하면서도 경제성장의 역기능에서 비롯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이를 완화하며, 사회적 시민권에 근거한 여러 제도적 질서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선진 복지국가는 성장 체제 안에서 높은 물질적 생산과 소비, 그리고 높은 수준의 물질적 복지 수준을 영위해 왔습니다(Hirvilammi, 2020). 이렇듯, 복지국가의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성장과 생태의 상충관계에 대한 탈성장 및 포스트 성장론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복지국가가 녹색 전환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풀어야 할 ‘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1990년대 이후 선진 복지국가에서 성장-분배-생태의 구체적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변화하는가? 국가별 어떠한 유형^{type}과 정도^{degree}로 나타나는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관찰되는가?

이 연구는 크게 선행연구에서 간과했던 네 가지 측면을 보완한 것입니다. 첫째, 복지국가를 환경 차원을 포함하여 새롭게 유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면 이를 실증하고 사례에 대한 지식을 더욱 심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성장-복지-생태 차원을 유형화한 일부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책 산출^{output}과 정책 성과^{outcome}를 혼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명료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 간 ‘목표’에 집중하여 ‘성과’ 차원을 분석합니다. 셋째, 본 연구는 국가별 유형 및 양상뿐만 아니라 ‘변화’에도 초점을 둡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일 시점 또는 단기간을 분석하거나 최근 시점의 연구들이 부재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19년을 분석 시점으로 설정하여 약 30년 간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연구의 단계는 먼저 선정 국가별 기술 분석을 통해 경제, 분배, 생태 영역의 30년 간의 흐름을 조망하고 둘째,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통해 각 영역별 성과의 유형과 정도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셋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이론적 지식을 추가하여 결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해석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정한 국가 사례는 이미 환경 분야에서 선제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를 포함하였고,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에 속하는 영국, 미국을 포함하였으며 이외에도 프랑스, 한국, 일본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분석 기간은 1990년부터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직전 시점인 2019년까지이며, 퍼지셋 이념형 분석의 경우 해당 기간의 10년 단위의 네 시점인 1990년(t1), 2000년(t2), 2010년(t3), 2019년(t4)을 선정하였습니다.

영역별 개념 및 선정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국가의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해, (i) 경제 영역의 목표는 GDP 성장, (ii) 복지 영역의 목표는 소득분배, (iii) 생태 영역의 목표는 탄소배출 저감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개념화의 근거는 첫째,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생태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관계(성장과 생태의 상충), 그리고 복지국가의 관계(성장과 복지의 결합) 간의 ‘모순’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태경제학의 핵심 논지는 GDP 성장으로 측정되는 경제성장 목표와 물질적 한계를 가지는 생태 영역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경제의 목표는 GDP 성장으로 개념화하고 1인당 GDP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태적 목표는 가장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배출 저감으로 설정하고, 생태경제학에서 권장하는 소비 기반 배출량 통계인 1인당

탄소발자국을 활용하였습니다. 복지 영역의 목표는 소득분배로 개념화하고 가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소득분배를 복지 영역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복지국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소득분배였을 뿐만 아니라 녹색 전환의 다양한 전략들 중 공통된 목표 중 하나가 재/분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 소득분배 지표들 중에서 장기시계열 분석에 적합한 지니계수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역별 대표 성과 지표의 선정은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인 질적비교연구QC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의 ‘논리적 최소화 원칙’에 근거합니다.

주요 연구방법론은 QCA의 한 흐름인 퍼지셋 이념형 분석입니다. 사례 중심 접근과 변수 중심의 장점을 통합한 접근으로, 집합이론 관계set-theoretic relation에 근거하여 중범위 수준의 사례에 대해 전체성과 특수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입니다. 이념형 분석에서 양적 변수를 활용하지만, 각 자료의 질적구분점을 연구자의 지식과 통찰력에 근거하여 측정calibration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세 가지 속성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여덟 가지 결합 배열 중에서 ‘생태복지형’을 제외한 일곱가지 유형(균형형, 성장복지형, 녹색성장형, 성장형, 복지형, 생태형, 저성과형)이 도출된 것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장복지형’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이 속하였으며, ‘성장형’에는 미국, 네덜란드, 한국, 일본이 속했습니다. ‘녹색성장형’에는 영국이 속하였고, 성장-분배-생태 영역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균형형’으로 이행한 국가에는 프랑스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녹색전환을 시작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은 결과적으로 ‘균형형’으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네 국가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낮은 수준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공공관리 능력을 갖춘 만큼 환경 성과를 개선한 경우에 ‘균형형’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특히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생산기반 배출량을 상당량 감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기반 탄소발자국에서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비록 네 국가 모두에서 재생에너지 공급의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성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노르웨이, 독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게 나타나며(노르웨이, 스웨덴), 국제무역 관계에서의 탄소배출 및 물질소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덴마크) ‘균형형’으로의 이행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및 사회의 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높은 물질적 생활수준과 생태적 손실의 강력한 연계를 끊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Koch & Fritz, 2015). ‘성장복지형’에 속할 경우, 다른 성장의 속성을 가진 유형인 ‘성장형’, ‘녹색성장형’, ‘균형형’에 더 가깝게 나타났으며 ‘생태복지형’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둘째, ‘균형형’으로 이행한 프랑스의 경우,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복지성과를 나타내면서도 환경 성과를 개선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0년대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해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고 탄소배출을 저감한 제도적 노력이 존재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상당 수준의 에너지 자립도를 달성하고 1인당 탄소발자국을 기본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탄소고착화는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 속도를 제한하면서 녹색 전환으로의 이행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분석한 10개의 사례 국가 중에 실질적으로 성

장, 분배, 생태 영역의 성과를 모두 달성한 국가가 부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녹색성장형’으로 이행한 영국의 경우,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해 탄소배출을 감축해왔으며, 특히 석탄 분야의 탄소배출을 감축하면서 환경성과를 개선해 왔습니다. 녹색 산업혁명이라고도 부르는 영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되고, 녹색 금융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설정됩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지향형 그린뉴딜의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 전환에서의 공정한 분배 및 사회정책과의 연계 측면은 부족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론이 주장하고 있는 GDP 성장과 탄소배출 및 자원 소비의 ‘절대적’ 탈동조화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부족하며 장기적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Hickel & Kallis, 2020). 한편 영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1990년 이후 시장소득 불평등도가 심화됨에 따라 낮은 수준의 소득분배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 2019년에 ‘성장형’으로 이행한 미국, 네덜란드, 한국, 일본의 경우에 높은 소득불평등 수준과 높은 탄소배출량을 특징으로 합니다. 미국의 경우,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으로 탄소배출량이 상당하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고 시장소득 불평등이 지난 30년간 심화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 지출 감축으로 지난 30년 간 소득재분배 기능이 낮아졌고, 재생에너지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노력을 시작하였으나 국제 무역 및 운송 의존도로 높아 환경성과는 낮은 편입니다. 한국은 1990년 저발전국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으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아졌고, 소득재분배 기능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 수준입니다. 또한 에너지 및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인해 전반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노력이 지연되면서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네 가지 측면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경제성장 체제가 기후변화 위험 및 소득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복지국가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더하여 시장소득 불평등이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하는 1차 분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현재의 불평등의 심화는 상위 계층의 소득과 부의 집중도가 높고 공공에서 민간 부문으로의 부의 이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분배뿐만 아니라 사전분배 영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환경 분야에 선도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소비 기반 탄소배출량에서 성과가 낮다는 점은 또 다른 난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비 기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및 물질 소비량의 감축이 필요합니다. 스웨덴, 덴마크에서 영토 내에서의 소득분배 및 탄소배출 저감에 일정 부분 성과를 높이고 있으나, 최종 수요를 반영하여 지구적 차원의 공정과 책임의 할당이 필요합니다.

셋째, 탄소배출의 계급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차원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상위 계층의 탄소배출량이 매우 높다는 점은 기후변화 위험을 야기한 원인의 불평등, 결

과의 불평등, 자원의 불평등이 상호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복합적 생태-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상위 계층에 대한 차등적 책임 부과, 기후변화 위험으로 인한 피해의 불평등 및 전환의 비용이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예방·보상하고, 근본적으로 사회적 취약성의 구조를 개선하고 자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국가의 녹색 전환의 이행 방향과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2019년 시점에 분석 대상 국가 모두는 성장의 속성을 공유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성장복지형’에서 ‘균형형’으로 이행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성장형’에 속한 국가들의 경우 중·단기적으로 ‘녹색성장형’에 속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녹색 전환의 담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탈생산주의적 측면에서의 시민주의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생태-복지의 접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민주의의 역사적 유산인 민주주의, 다양성, 돌봄에 대한 부분적 인정과 젠더 평등의 부분적 실현은 생태 영역과 접점을 가집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시민주의와 탈생산적/탈성장 가치를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때 탈생산/탈성장의 의미는 생산주의(성장)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념화하는 것이며 경제를 민주화하여 다시 사회 및 생태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과 자본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덕적인 영역을 사회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지를 중심으로 녹색 전환을 구상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소득분배와 고용중심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전환^{deep transformation}은 경제의 녹색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삶과 노동, 복지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다학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복지국가 비교 연구에서 환경 차원을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장-분배-환경 영역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생태-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시사하였습니다. 후속 연구 제언으로는 첫째, 각 영역별 대표 성과 외의 다양한 차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둘째, 성과와 정책 산출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의 향후 연구계획은 마테오 만델리(Matteo Mandelli) 박사가 제기한 ‘성장-사회-생태의 트릴레마’를 중심으로 국가 비교 연구를 보다 정교화할 예정이며, 지속가능복지 연구의 이론화 및 한국 사례 연구, 생태-사회정책 관련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 소유권과 기본소득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토머스 페인(1737~1809)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 ‘대서양 혁명들’의 시기에 가장 유명한 정치 저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자 현대 정치의 보수-진보 논쟁에서도 끊임없이 준거점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다.¹⁾

페인은 미국 독립 선언의 연료 역할을 한 『상식』(1776)과 연작 “아메리카의 위기”(1776~1783)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면서 쓴 『인권』(1791, 1792)을 통해 현대 정치의 기본원칙과 구성을 열렬히 옹호한다. 그것은 공화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페인은 정치적 급진파에 머물지 않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흥 속에서 드러난 사회경제적 문제, 즉 빈곤의 존속과 불평등의 확대에 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상의 진화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칭호 이외에 “사회 보장의 진정한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한다.²⁾ 또한 21세기 들어 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정당성과 의미를 제대로 논구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³⁾

이런 면모를 잘 드러내는 게 그의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이라 불리는 『토지 정의』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오랫동안 잊혀진 텍스트였다. 그건 아마 급진 공화주의자로서의 그의 면모가 여전히 강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마 더 중요하게는 그 텍스트에 담긴 그의 주장이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와 상충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오래 전 한 유토피아주의자의 지적 놀이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다음 『토지 정의』의 귀환이 있었다. 그건 현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사상의 궤적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속에서 『토지 정의』는 모두에게 속

1) 유벌 레빈,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 에코리브르, 2016.

2) Whitfield J. Bell, The Bust of Thomas Paine, 1974, 16. Bernard Vincent, The Transatlantic Republican: Thomas Paine and the Age of Revolution, 2005, 124에서 재인용.

3) 안효상, “서양의 기본소득 논의의 궤적과 전망,” 『역사비평』, 120호, 2017

하는 자연적 부가 있다는 것, 이를 모두에게 적절하게 방식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밑바탕에 깔린 주요한 원칙과 함의를 최초로 밝혀낸 ‘위대한 팸플릿’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문명과 그 불만

토머스 페인은 『토지 정의』를 1795년에서 1796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프랑스에서 썼다. 이때는 자코뱅의 테러 독재가 끝나고 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이 다시 강화된 총재 정부 시기였다. 페인이 팸플릿을 쓴 직접적 배경은 총재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1795년 헌법이었다. 그가 보기에 이 헌법에는 중요한 결점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동등한 선거권이 아니라 재산 자격에 기초한 선거권이었다. 다시 말해 토지세나 동산 재산세를 내는 사람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었던 것이다. 공화주의자인 페인이 보기에 이런 재산 자격 참정권은 “선거의 존엄함”을 떨어뜨리는 일이며, 따라서 수정되어야 했다. 또 다른 배경은 이 시기에 심각해진 경제위기와 불평등이었다. 계속되는 전쟁, 심각한 인플레이션, 농업 위기, 국유 재산 매각 등으로 민중의 삶은 극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페인은 『토지 정의』의 출판을 미루었는데, 당시 전쟁 중이어서 그가 제안하는 개혁 과제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797년에 『토지 정의』를 출판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자신의 이전 저작인 『이성의 시대』 2판을 비판한 란다프의 주교 왓슨에게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 주교는 어떤 설교에서 “신이 부자와 빈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에 맞서 페인은 “신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뿐이다. 신은 그들에게 지구를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반박한다(62).⁴⁾ 이는 페인의 평등주의적 시각을 당시의 언어로 온전히 드러낸다.

급진적 공화주의자인 페인이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토지 정의』의 고유한 점은 이를 사회경제적 권리와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1795년 프랑스 헌법의 재산 자격 선거제 그리고 당시의 극심한 불평등과 빈곤을 보면서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재산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토지 정의』의 또 다른 고유한 점은 재산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경제적 권리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미 페인은 1792년에 출판한 『인권』 2부의 마지막 장에서 빈민 구제, 연금, 빈민 교육, 산모 수당 등등 일련의 복지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별다른 근거나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권』 2부는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앞부분과 광범위한 복지 제공을 주장하는 뒷부분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저술이다. 이에 반해 『토지 정의』는 대지에 대한 자연적 소유권에 기초하여 모두에게 그 몫을 분배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4) 『토지 정의』의 인용은 월간 『시대』 50호(2017년 7-8월)에 실린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와 해설에서 가져왔으며, 괄호 안에 쪽수만 표시했다.

사실 페인은 당시 확대되어 가던 상업을 예찬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유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는 ‘사회’ 자체가 대체로 교환 및 상업 관계로 구성된 것으로 바라보았고, 이때 상업은 상호성, 호혜성, 협동의 이점을 발휘하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힘이였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계몽사상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가 수렵채집, 목축, 농업 사회의 단계를 거쳐 상업 사회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명의 발전은 그 이면, 즉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을 낳았다는 것이다. 페인은 현재의 문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휘황찬란한 겉모습에 현혹당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극도의 비참함에 충격을 받는다. 이런 문명의 두 모습 모두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이른바 문명화된 나라들에서 가장 풍요로운 인간과 가장 비참한 인간을 찾아볼 수 있다(63)

그 이유는 토지의 독점적 소유 때문이다. 우선 페인은 자연 상태에서 토지는 “인류의 공동재산”이었으며, [경작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공동재산이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어 다음과 같이 원초적 공산주의 상태를 가정한다(64).

원래 토지 소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인간이 대지를 만들지 않았으며, 인간에게 대지를 점유할 자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의 일부를 영원히 자신의 재산으로 주장할 권리는 없었다. 대지의 창조자도 최초의 권리 부여 행위를 해야 하는 토지 등기소를 열지 않았다(65~66).

토지 소유는 경작과 함께 시작되었다. “개량이 이루어지는 대지 자체와 경작에 의한 개량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인의 공동의 권리가 개인의 경작된 권리와 혼동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토지 소유를 낳았다. 그럼에도 페인은 “두 권리가 구별되는 종류의 권리이며, 세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라고 말한다(65). 이어서 페인은 이렇게 말한다.

대지 자체가 아니라 개량된 가치만이 개인적 소유라는 것이 진실이다. 그러므로 경작된 토지의 모든 소유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기초 지대(ground-rent) - 나는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더 나은 용어를 알지 못한다 - 를 공동체에 빚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제안된 기금은 바로 이 기초 지대에서 나온다(65)

페인이 말한 계획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상속세 10퍼센트를 거두어 기금을 만든 다음 21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15파운드 스텔링을 지급하고, 50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때부터 매년 10파운드 스텔링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토머스 페인은 원형적인 기초자산과 기본소득의 주창자가 되었다.

사적 소유[재산]의 근거와 한계 혹은 공동의 소유

토머스 페인도 참가했던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새로운 사회의 원칙이자 방향으로 설정했고, 우리는 여전히 그 그늘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더 중요한 문제는 페인도 인식했듯이 소유[재산]의 문제였고, 이를 둘러싼 입장은 현대 정치 이념의 스펙트럼을 구성했다. 자유주의는 소유의 절대성을 주장했고, 이에 기초해서 시장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옹호했다. 후일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흐름은 소유가 인권과 문명의 토대이긴 하지만 공공성과 다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정도 제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지금은 사실상 정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공산주의는 소유의 불가능성(혹은 부당성)을 말했고, 이에 따라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향유를 제안했다.⁵⁾

토머스 페인의 입장은 위에서 말한 세 흐름과 겹치면서도 미묘하게 달랐다. 앞서 본 것처럼 페인의 고유한 입장은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를 구분하고, 자연적 소유는 공동의 권리로, 인공적 소유는 개인의 권리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적 소유가 성립한 이후에도 공동의 소유에 해당하는 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페인의 입장은 사실 사적 소유의 성립에 관한 당대의 논변과 대결하면서 나온 것이다. 사적 소유는 그 이전에 공동의 소유, 혹은 공유지commons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페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대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적 소유가 성립했을 때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변은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동의consent 이론이 있다. 푸펜도르프는 “지구상의 모든 재산”을 “모든 사람이 무차별적으로” 취할 수 있지만, “평화, 안정, 훌륭한 질서”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처음부터 최소한 암묵적 동의”가 사람들 사이에 필요하다고 보았다.⁶⁾

두 번째 입장은 그로티우스는 ‘선점’ 이론이다. 푸펜도르프는 대지의 대한 공동의 소유로부터 모두가 이를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는 ‘긍정적’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로티우스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를 취득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공동의 소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는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로티우스는 사적 소유를 키케로의 ‘선점’ 이론에 기대어 정당화한다. 키케로가 드는 예는 극장의 빈 좌석이다. 자리가 비어 있다면 누구나 그 자리를 차지할 자유가 있으며, 부당하게 거기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로티우스는 이 논리를 사적 소유에 적용해서 공동의 소유란 것은 실제로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빈 좌석)이며, 이 세계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⁷⁾

사적 소유를 정당화하는 세 번째 논변은 유명한 로크의 ‘취득의 노동 이론’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자신의 노동을 자연 자원에 혼합해서 나온 것에 대해 배타적인 사적

5) 알베르 소블, “현대사에서의 프랑스 혁명,” 민석홍 편, 『프랑스 혁명사론』, 까치, 1988.

6) S. Pufendorf, On the Duty of Man and Citizen, ed. James Tully, 1991, 84-85.

7) H. Grotius, The Rights of War and Peace, ed. R. Tuck, 2005, 2: 420-21.

소유권이 있다는 게 로크의 논변이다. 물론 노동을 혼합했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어떤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로버트 노직의 유명한 반론이 있긴 하지만, 로크의 논변은 여전히 강력한 사적 소유의 정당화 근거이다.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은 로크 자신도 노동 자체만큼이나 노동을 통한 결과인 개량도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는 것이다.⁸⁾

노동의 혼합 및 노동을 통한 개량이라는 로크의 논변은 이후 노동만이 가치를 부여한다는 ‘노동가치이론’으로 확립되어 근대 정치경제학의 근거이자 사회 구성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페인은 노동을 통한 개량이라는 로크의 논변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개량을 통한 사적 소유의 성립 이후에도 공동의 소유에 대한 모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로크와 갈라진다. 이 지점에서 사적 소유의 절대성은 사라진다.

페인에게서 더 흥미로운 점은 자연적 소유만이 아니라 인공적 소유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할 때 드는 논거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개인 재산[동산]은 사회의 효과다. 개인이 독자적으로 토지를 만들어 내는 게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도움 없이 개인이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개인을 사회에서 분리시킨 다음 그에게 섬이나 대륙을 준다 하더라도 그는 개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목적과 연결된 수단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수단이 없다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생산한 것을 넘어서는 모든 개인 재산의 축적은 그가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70).

페인의 이런 주장은 로크가 가정한 것과 달리 고립된 개인이 자신의 노동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또한 사적 소유의 절대성을 소멸시킨다. 이런 페인의 생각은 19세기 프루동의 ‘사회적 힘’과 맑스의 ‘사회적 힘’으로 이어지며, 오늘날에는 인공적 공유부라는 사고까지 나아갔다.

더 나아가 페인은 노동 착취 이론이라고 할만한 것의 단초까지 제시한다.

만약 우리가 사태를 상세하게 살필 경우 개인 재산의 축적은 많은 경우에 그것을 생산한 노동에 너무 적게 지불한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일한 사람은 나이 들어 고통 속에 죽고 사용자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71).

아직 ‘산 노동’의 고용을 통한 ‘잉여 가치’의 생산이라는 인식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페인의 이런 주장은 당시 발흥하던 자본주의의 논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 존 로크, 『통치론』 가치, 1996. 5장 ‘소유권에 관하여.’

나오며

“마지막 위대한 팸플릿”이지만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토지 정의』는 페인의 사상의 진화 속에서 현대 사회의 위기에 해법을 모색할 때 중요한 준거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위기는 대부분 인류 공동의 위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는 사회의 공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를 구분하는 페인의 소유 이론, 부의 생산이 사회적 효과에 따른 것이라는 사회적, 집합적 힘에 대한 이해, 원형적인 착취 이론 등은 지대 추구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오늘날 어찌면 훨씬 더 큰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본소득

이건민 반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흥미로운 책이 나왔다. 2022년에 『그건 내 건데: 기본소득, 모두가 조건 없이 찾아야 할 권리』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양서를 집필한 이선배 작가가 이번에는 어린이가 쉽고 재미있게 읽을만한 좋은 책인 『게임 체인저: 기본소득』을 우리 앞에 내놓았다.

이 책은 기후위기, 로봇과 AI로 인한 대량실업 공포,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성불평등이라는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걱정하고 이의 해결을 열망하는 다섯 아이가 가상 게임 공간에서 기본소득에 힘입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 강기후, 노본회퍼, 지소유, 극득남이라는 네 아이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또 다른 아이인 공유부, 그리고 토머스 페인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접하고 기본소득이 우리 시대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섯 아이는 기후재난, 일자리 재난, 극심한 소득불평등 및 성불평등과의 대결에서 기본소득을 게임 체인저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문제 해결에 성공한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기본소득을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일의 결과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154면)을 뜻하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강노지극’(“힘찬 활에서 튕겨 나온 화살도 마지막에는 힘이 떨어져 부드

러운 비단조차 뚫지 못한다.”라는 뜻, 153면)이라는 고사성어는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질서가 매우 공고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적, 생태적 전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작가의 긍정과 믿음을 잘 보여주는 말로 생각된다. 둘째, 기본소득이 허무맹랑한 실현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갖가지 난제들의 해결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기후재난, 일자리 재난, 극심한 소득불평등 및 성불평등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현재의 문제를 실용적 이면서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유용한 해법으로 위치 짓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즉 현재 상황을 하나의 극단으로, 실현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해법을 또 다른 극단으로 놓고, 기본소득을 양극단에서 벗어난 실현 가능하고도 필수적인 정책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매우 영리하고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공유부가 “인간들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땅, 하늘 우리 모두의 것”이므로 “공유부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자연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195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7장은 개발주의, 성장주의, 생산(력)주의, 소비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재의 생태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상 게임이라는 설정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맹하나 작가님의 그림은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책을 읽으면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당성,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다섯 아이는 함께 깨닫고 직접 행동에 나서므로써 네 가지 대결에서 승리한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큰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과반수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소득이 정책으로 바로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지지 세력을 전반적으로 넓힘과 동시에 기본소득의 정책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론화와 숙의 토론이 그 출발점 중 하나라고 할 때, 그리고 저자가 독서교육의 전문가임을 고려해 볼 때, 추후 기본소득을 의제로 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공론화 과정이나 모의 토론을 담아내는 후속작이 발표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1. 23차 대회의 주제와 특징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이하 BIEN)는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학자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렸고 올해 제23차 BIEN 대회는 영국 바스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대회의 주제는 ‘급진적 뿌리 되찾기: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¹⁾ (Reclaiming Radical Roots: Basic Income and Socio-ecological Transformation)이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회의 주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¹⁾

BIEN 2024는 경제적으로 정의롭고 정치적으로 포용적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사회적 전환의 근본적인 도구로서 기본소득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우리는 기후 변화, 전세계적 불평등, 우익 포퓰리즘, 기술 혁신 등 서로 연관된 여러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UBI의 사례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실현에는 여전히 주요한 장벽이 있다. 국가적 맥락에서 UBI의 시행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징벌적이고 보편

1) <https://www.bien2024.net/theme>

성이 떨어지며, 일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현상 유지나 이익 추구에 의해 포획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 기본소득은 급진적 사회적 전환의 수단인가, 아니면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의를 개혁하고 회복하기 위한 도구인가?
- 기본소득은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배상^{reparation}, 에코페미니즘, 포스트 성장 등 사회적 전환과 사회 정의를 위한 인접한 정치 운동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보편주의 또는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제안은 UBI로 가는 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급진적이거나 전환적 잠재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킬 것인가?
- 사회적으로 전환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정책 설계, 옹호, 연구 또는 파일럿을 이끄는 원칙은 무엇일까?
- 기본소득이 노동 공급이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파일럿이 설계되는 경우가 많지만, UBI에 대한 보다 급진적 비전을 가진 연구팀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른 (더 전환적인) 지표나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 어떻게 하면 파일럿 운영을 넘어 가시적인 변화와 더 넓은 정치적 동원과 정책 변화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러한 주제 아래, 기획 세션 및 여섯 가지의 세션이 동시에 개설되었다.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이라는 급진적 주제를 탐구하는 것만큼 다양한 주제의 세션들이 열렸다. 구체적으로 (1) 기본소득 현실화하기, (2) 사회정책, (3) 사회-생태 정의1, (4) 사회-생태정의 2, (5) 실험들, (6) 포푸리^{Potpourri}의 병행 세션이 진행되었다. 세션별 주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²⁾

이번 대회와 특징적인 부분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본회의와 일부 세션이 생중계되었는데, 6개 패널 세션 중 2개 세션은 대면과 줌 회의를 결합하여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4개의 패널 세션은 대면으로만 진행되었다. 둘째, 해당 세션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열렸다. UBI 관련 영화 상영 세션뿐만 아니라 로비에서는 UBI 관련 게임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공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대회 첫째 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스카이라인 워크^{Skyline Walk}, 둘째 날 저녁 시간에는 바스 시내 투어^{Bath Walking Tour}가 진행되었다.

2) 각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북을 참조하기를 바란다. <https://www.bien2024.net/congress-booklet>

이 교외 활동에 참여하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했다. 또한 대회 시작 전날부터 대회가 진행되는 매일 저녁에는 침묵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셋째, 대회 3일 차에는 영국의 날UK Day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영국 시민사회와 BIEN 대회 참여자는 이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행사는 ‘함께 미래를 준비합시다: 21세기에 적합한 사회보장Let’s face the future together. Social security fit for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센트럴 배스 Central Bath의 유서 깊은 길드홀Guildhall에서 열렸다. 연사로는 전 웨일즈 제1부 장관 마크 드레이크포드Mark Drakeford, 전 녹색당 의원 캐롤라인 루카스Caroline Lucas, 저명한 토지 권리운동가 가이 슈룹솔Guy Shrubsole 등이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참조할 수 있다.³⁾

넷째, 이번 대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정신을 반영한 ‘모두를 위한 공유의 원칙Shared Principles for All’을 세웠으며 이하 전문은 다음과 같다.

BIEN 2024에서 함께 만드는 무조건성

기본소득의 가장 급진적인 측면은 아마도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무조건성일 것입니다. 무조건성은 우리의 경험이나 현재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과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 무조건성의 정신을 우리 문화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대회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에 도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모습과 느낌이 될까요?

BIEN에 오시는 분들을 초대하여 직접 체험해보고 발견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모두를 위한 하나의 초대장입니다. 패널, 좌장, 청중 참가자, 방청객 등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재생산하는 권력과 조건의 일상적 관행과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자는 초대장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가장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무조건적인 공간을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종종 무언의) 조건에 의해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환영받을 것이며 이는 필요한 일입니다.

모두를 위한 공유의 원칙 Shared Principles for All

- 말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말이 정말 이 공간에 도움이 될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3) <https://actionnetwork.org/events/let-us-face-the-future-together-social-security-fit-for-the-21st-century?nowrapper=true&referrer=&source=>

- 말을 자주 하고 또 말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서세요.
- 다른 사람만큼 말을 자주 하지 않고 말하기가 불편한 사람이라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 항상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들은 내용 중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공유하세요. 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발표자가 그 부분을 들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표자가 ‘예’라고 대답하면, 명확하게 공감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전달하세요.
- 우리는 모두 다른 삶의 경험에서 왔고, 모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 살아있는 경험과 학문적 지식은 모두 소중합니다.
- 겸손한 자세로 자신이 모르거나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 서로를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지 맙시다(열정은 좋지만!). 우리는 관계를 만들고 서로 의지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서로를 친구이자 동료로 대합니다.
- 친절하게 대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세요. 배려하세요. 협동심을 발휘하세요.

개인적으로 영국 방문은 처음이었다. 대회 며칠 전에 런던에 도착하여 관광을 한 후 기차로 약 1시간 30분 가량 이동하여 바스Bath 시내에 도착했다. 런던과 달리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에 들었다. 시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 바스 스파Bath Spa 기차역에서 내린 곳이 시내의 중심이었고, 바스 대학은 산 위에 있어서 버스로 약 15분에서 20분 가량 더 들어가야 했다. 바스대학은 산 속에 있어서 더욱 운치 있었다. 방학인지 학생들은 많이 없었고 나는 3일 내내 대학의 1인 기숙사에 묵었다. 큰 창과 큰 나무가 반기는 정갈한 방이었는데 나는 꽤나 그 방이 마음에 들었다. 만일 큰 창이 없었다면 산 속에 사는 다양한 새들의 목소리로 아침잠을 쉽게 깰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공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 속에 산책하기 좋았던 공간이었다.

이에 반해 구내식당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거의 없었다. 구내식당마저도 방학이라 일찍 문을 닫는 실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의 조식, 점심, 그리고 리셉션을 제외한 저녁식사의 경우에는 케이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또한 대회 전날의 비공식 모임과 대회 첫날의 리셉션을 위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약 15분 가량 시내로 이동해야 했다. 시내에서 대학으로 오는 마지막 버스는 밤 11시 이전에 끊겼기 때문에 모두들 일찍 귀소해야 했다. 오히려 다음날 대회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 또한 좋았다.



바스대학교 산책길



바스대학교 기숙사

이번 대회가 바스대학에서 열린 이유를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바스대학교는 최근 몇 년간 기본소득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UBI 파일럿 네트워크(UBI Piloters Network), 정책연구소의 UBI 랩(Institute for Policy Research's UBI Lab), WorkFREE 시범 프로젝트(WorkFREE Pilot Project), 그리고 올해 대회의 공식주최자인 Bath UBI Beacon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Bath UBI Beacon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협업 가능한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대학의 연구커뮤니티가 주요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UBI Bath 팀에는 다양한 연구 분야를 가진 다양한 출신 국가의 연구자들이 모여 일하고 있다. 특히 영국 최초의 기본소득 연구소를 바스대학에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UBI 파일럿 운영, UBI와 공공보건, UBI와 기후변화, 기술변화와 일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도 UBI Bath 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혹은 협력하고 있는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들이 발표되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 글은 BIEN 참가기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았다. 여섯 개의 세션이 동시에 열렸기 때문에 필자가 관심이 있는 세션 외에 물리적으로 대부분의 세션을 참가하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한국 발표자의 경우 강남훈 선생님의 '공유 지대와 공유부 배당(Commons Rent and Commons Dividend)', 유종성 선생님의 '자유, 평등, 지속가능한 효율성이라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terms of Freedom, Equality, and Sustainable Efficiency)' 발표가 있었다.

<2024 BIEN 대회 일정표>

일자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UBI를 현실화하기	사회정책	사회-생태 정의 1	사회-생태 정의 2	실험들	포푸리
8월 28일 (대회전날)	오전-오후	도착					
	저녁	비공식 모임					
8월 29일 (첫째 날)	08:00-10:00	등록					
	10:00-11:30	기획세션					
	11:30-13:00	세션 1					
		남아공의 기본소득 제안이 급진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전환적 효과	배상(reparations) 및 소득보장: 형사 사법 시스템의 불공정성 시정	기후 정의, 글로벌 정의, UBI -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UBI의 전환적 가능성	웨일스 돌봄 휴직자 (Care Leavers)를 위한 기본소득 파일럿: 평가 개요	무조건적 자유에 대한 대화: 보편적 기본소득과 사회적 권리 / 데이비드 카사스
	13:00-14:30	점심식사 + Skyline Walk					
	14:30-16:00	세션 2					
		인도의 현금 기반 사회 정책	기본소득의 전환적 효과	노동 및 탈출(Exit)	Give Directly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BIEN: UBI 데이터	저자와 비평가의 만남(UBI: Essential Knowledge)
	16:00-16:30	휴식시간					
	16:30-18:00	세션 3					
		기본소득을 향한 지지체의 길: 마리카(Maricá)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기본소득과 노숙자	가족 구성	평화를 위한 기본소득	WorkFREE의 UBI+: 변화(Transition)를 넘어 전환(Transformation)으로?	영화 Outgrow the System
18:00-20:00	리셉션						
로비 설치	게임 옴포리엄(게임을 사용하여 UBI와 소통하고 실험하는 인터랙티브 게임과 디스플레이를 하루종일 이용)						
	InHerHands, UBI Monopoly 기본소득 정책 설계/시범 시행을 위한 간단한 지침 생성 (using LEGO® SERIOUS PLAY® methodology)						
8월 30일 (둘째 날)	08:00-09:30	명상, 산책					
	09:30-11:00	세션1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삼는 방법	기본소득과 예술	BIEN: 지역 허브/ 개발도상국에서 UBI가 실현 가능한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얻은 교훈	기본소득 실험의 윤리	마리카(Maricá)	UBI와 영화: 남아프리카공화국 영화 3편 (shining path 포함)
	11:00-11:30	휴식					
	11:30-13:00	세션2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정치적 의제로 삼는 방법	기본소득과 예술	현물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 서비스 캠페인, 기본소득 운동,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더 넓은 이해	UBI와 생태-사회 국가: 변화, 개혁, 아니면 모두?	글로벌 사우스의 원주민과 함께, 그리고 원주민을 위한 기본소득 시범 사업 탐색	영국의 보편적 기본소득과 지속가능한 식단 사이의 역동적 연관성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공동 제작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세션3					
		UBI와 노조 운동: 노조가 UBI를 현실화하고 급진적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안정의 씨앗을 뿌리다	BIEN 총회	세계적으로 사고하기	현금 '플러스' 무엇?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파일럿부터 정책 일관성까지?	기본소득과 사회적 조각 (Sculpture)
	15:30-16:00	휴식					
16:00-17:30	세션4						
	유니버설 크레딧에서 UBI로 변화	타협의 기술: 캐나다 맥락에서 전환적 사회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기본소득 연구에서의 성별균형과 관점에 대한 탐구	영화 상영: Unconditional	현금 '플러스' 무엇?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파일럿부터 정책 일관성까지?	기본소득과 사회적 조각	
18:30-20:00	버스 시내 투어(Bath Walking Tour)						
20:00-23:00	대회 저녁식사						



8월 31일 (셋째 날)	08:00-09:30	명상, 산책					
		세션1					
	09:30-11:00	(파일럿을 통한) 정치적 지지 구축	프레이밍과 내러티브	UBI과 거버넌스	너무 단순한 것이 좋은가?	젠더 역량강화: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얻은 통찰	이론과 UBI
	11:00-11:30	휴식					
		세션2					
	11:30-13:00	(파일럿을 통한) 정치적 지지 구축	재원마련과 실현가능성	젠더와 교차성	부채 없는 돈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UBI의 역할	이론과 UBI
	13:00-14:00	점심식사					
		세션3					
	14:00-15:30	인도 UBI 실현 로드맵의 공동제작: 글로벌 적용을 위한 템플릿	재원마련과 실현가능성	BI 정의 - 몇 가지 미해결 문제 1	BIEN: BIEN의 미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UBI의 역할	인접 제도
	15:30-16:00	휴식					
	세션4						
16:00-17:30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UBI: 정책, 정치 및 사회적 수용성 탐색하기	재원마련과 실현가능성	더 많은 식량, 더 많은 식량 안보	-	-	-	
17:30	대회 종료						

이번 해외 동향에서는 필자가 참여한 세션의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이번 BIEN 대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논의되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1) UBI Bath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2) UBI Data, (3) 브라질 마리카Maricá의 사례다. 관련 추가 정보는 각주에 달아두었으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제 2024년 BIEN 대회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를 하나씩 살펴보자.

2. UBI Bath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1) WorkFREE 프로젝트

인도와 영국의 학자, 활동가, 시민사회기관이 모여 인도 하이데라바드 도심의 비공식 정착촌(또는 바스티라고 부르는) 네 곳에서 ‘UBI+’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바스티의 모든 주민들(약 1,250명/350 가구)은 2022년부터 18개월 동안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24개월 동안 지역사회 조직가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이 시범사업을 WorkFREE라고 부른다. 바스티의 주민들은 주로 이 지역으로 이주한 1세대 또는 2세대로 대다수의 인구는 불가촉 천민 카스트 출신이며 빈곤한 상태에 처해있다. 이들은 쓰레기 줍기나 가사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

이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인도의 150만에서 400만 명에 달하는 쓰레기 수거노동자들은 극심한 빈곤, 모멸감, 보이지 않는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카스트 제도, 물질적 박탈, 부적절한 위생으로 인



첫째날 기초 강연에서 UBI Bath 소개

해 여러 겹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가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착취적이고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 없이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여러 산업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필수 노동자이기도 하다. 이들이 없다면 인도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잘 분류되어 재활용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수거노동자 중 일부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거나 주정부로부터 소정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가정방문 수거의 경우 각 가정으로부터 매우 적은 금액을 받곤 한다. 이후 재활용 회사에 쓰레기를 판매하여 돈을 벌고 있다. WorkFREE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지역사회의 4인 가족 평균 가구소득은 약 INR 10,000(약 \$135) 수준이다. 이러한 쓰레기 수거 활동은 정규 교육이나 숙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참여하며, 하이데라바드에서 이 일을 하는 대부분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이 일을 선택하고 있다.

UBI+ 실험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한' 기존 주류의 노력이 실패했다는 좌절감에서 출발했다. 이에 WorkFREE 시범사업은 보편적 기본소득UBI과 필요/욕구needs에 초점을 맞춘 참여형 지역사회조직을 결합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이번 실험은 기존의 UBI 실험과 달리 다음과 같은 근본적 질문을 탐구하고자 한다. (i) UBI가 정말 노동시장의 자유를 촉진하는가, (ii) 착취를 실질적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종식시킬 수 있는가, (iii) UBI가 시민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 (iv) 녹색 전환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또한 기존 실험에서 주로 초점을 맞췄던 개인 수준의 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변화 및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모델링하였다. 현금 전달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중심의 관계적 '플러스' 요소를 연결한다. 다시 말해 이번 실험에서는 수혜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 수혜자와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직가를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관계적 '플러스'가 일상적으로 현금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 변화를 마련한

다는 새로운 관점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현금은 ‘시간을 만드는 것’, 즉 수혜자에게 끊임없는 업무 이외의 활동을 위한 삶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지역사회 활동의 ‘플러스’를 ‘공간 만들기’, 즉 지역사회가 함께 모여 그들의 삶을 집단적으로 이해하고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UBI+는 사람들이 더 많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실험은 무작위 대조 시험보다 혼합 방법 설계를 사용한다. 설문조사, 질적연구,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를 활용하여 누구에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문서화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문조사는 기초선, 중간, 종료, 실험종료 후 등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소비 모듈과 같은 전통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유의 사다리’와 같은 보다 혁신적 요소가 포함된다. 후자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주체성 등에 대한 실증자료가 될 수 있다. 질적 연구에는 인터뷰, FGI, 포토보이스, 역할극과 같은 참여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의도적으로 선정된 그룹에 대해 여러 시점에서 진행되며 주제분석 및 심층분석이 병행된다. 마지막으로 수개월에 걸쳐 참가자 커뮤니티에 대한 수개월 간의 현장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WorkFREE 연구 프로젝트의 의미는 UBI+가 빈곤완화를 위한 사회보장개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특히 노동과 자유, 존엄과 일, 필요의 개념, 관계성,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젠더 효과를 주요 연구 주제로 하여 분석한다. UBI의 지급이 노동으로부터의 탈출과 착취로부터의 협상력의 증진을 높일 수 있는지, 인도에서 쓰레기 수거노동자의 삶은 ‘불결하다’라는 낙인이 부여되는데 기본소득이 자기 존중과 존엄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필요’와 ‘관계성’인데, UBI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 기본소득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조직이 어떠한 관계적 ‘플러스’들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탐구이다. 이러한 관심은 기본소득이 비물질적 방식의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의 관심과도 연결되는 지점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구조화된 젠더 불평등과 여성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하게 다루는 또 다른 연구 주제이다. 이렇게 WorkFREE 프로젝트는 다양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실험의 결과가 기대된다. 결과는 2024년과 2025년에 보고될 예정이다.⁴⁾

2) 클라리사 사회적 보호CLARISSA Social Protection

클라리사 사회적 보호 파일럿은 WorkFREE와 마찬가지로 네팔과 방글라데시 다카의 슬럼 지역에 제공되는 ‘현금 플러스’ 사회실험이다. 해당 지역의 아동들이 위험한 조건 속에서 착취적 노동을 피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의 혁신적 해결책을 개발하는 5년 간의 행동연구 컨소시엄이다. 구체적으로 무조건적

4) <https://www.work-free.net/>

인 현금과 필요에 초점을 맞춘 참여형 지역사회 조직을 결합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실험은 개발연구소이자 파트너인 Bath, 국제 NGO인 Terre des Hommes, 거버넌스 및 개발연구소인 Brac가 주도하여 진행하며, 2024년과 2025년에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3) 영화제작에 참여

UBI Bath 팀은 여러 편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 첫째 날에 상영한 ‘Unconditional’은 무조건적 현금과 지역사회 조직화를 결합한 남아시아의 정책 실험의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 미디어 플랫폼인 오픈 데모크라시^{Open Democracy}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본소득의 조직화, 정책 운동, 정치적 잠재력에 대한 글, 동영상, 논평 등의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여기에 게시된 글과 영상들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매우 다채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어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기를 권한다.⁶⁾

대회에서 상영한 세 편의 영화를 조금 더 살펴보자. 먼저 <Unconditional>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전통적인 사회정책을 뒤집은 두 가지 고무적인 정책 실험에 대한 이야기다. 예고편은 다음에서 참고할 수 있다.⁷⁾

30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파일럿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지역사회 조직자들의 기여를 통해 'UBI+'의 힘을 조명하고, 무조건성이 사회정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명한다. 토론자로는 켄 로치 감독이 초청되었다.

둘째 날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단편 영화 세 편^{3 Short Films From South Africa inc. A Decent Path}이 상영되었다. <괜찮은 길^{Decent Path}>은 R350 보조금이 주요 수혜자 4명의 삶에 미친 영향을 조명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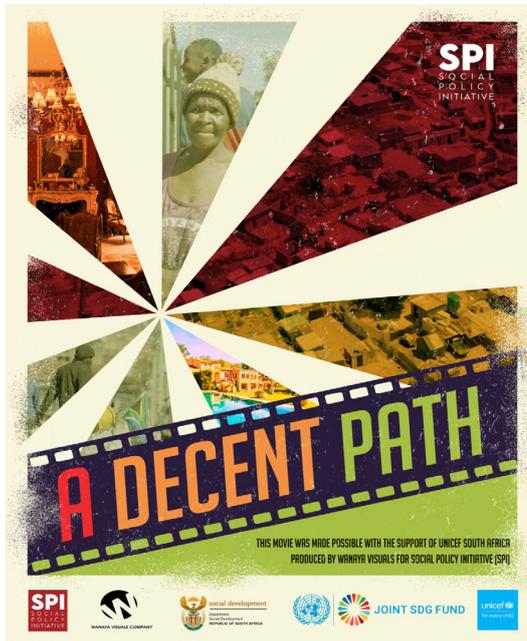


Uncondi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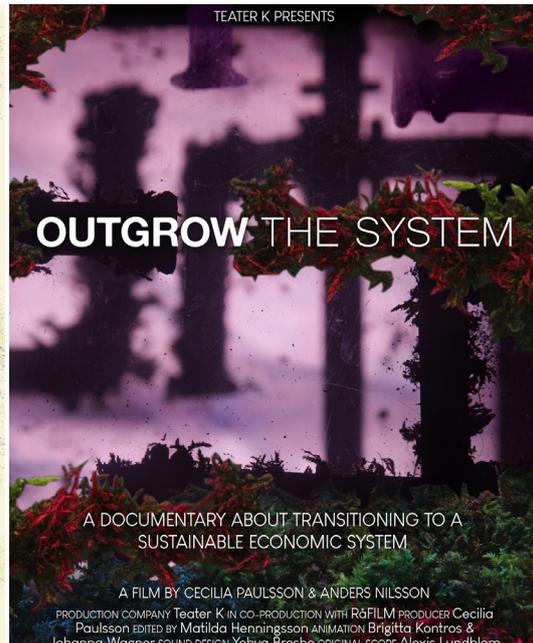
5) <https://clarissa.global/>

6) <https://www.opendemocracy.net/en/beyond-trafficking-and-slavery/universal-basic-income/>

7) <https://vimeo.com/988081115/d077561e6c>



3 Short Films From South Africa



Outgrow the System

력적인 다큐멘터리이다. 예고편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

셋째 날에는 <Outgrow the System>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풍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충돌하고 융합하도록 촉구하며, 전 세계 사회운동이 단순히 디스토피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비전으로 결집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6대륙 23개국 47개 도시에서 상영되었으며, 올해 6월 27일 인천 녹색기후기금에서도 상영된 적이 있었다. 예고편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⁹⁾

3. UBI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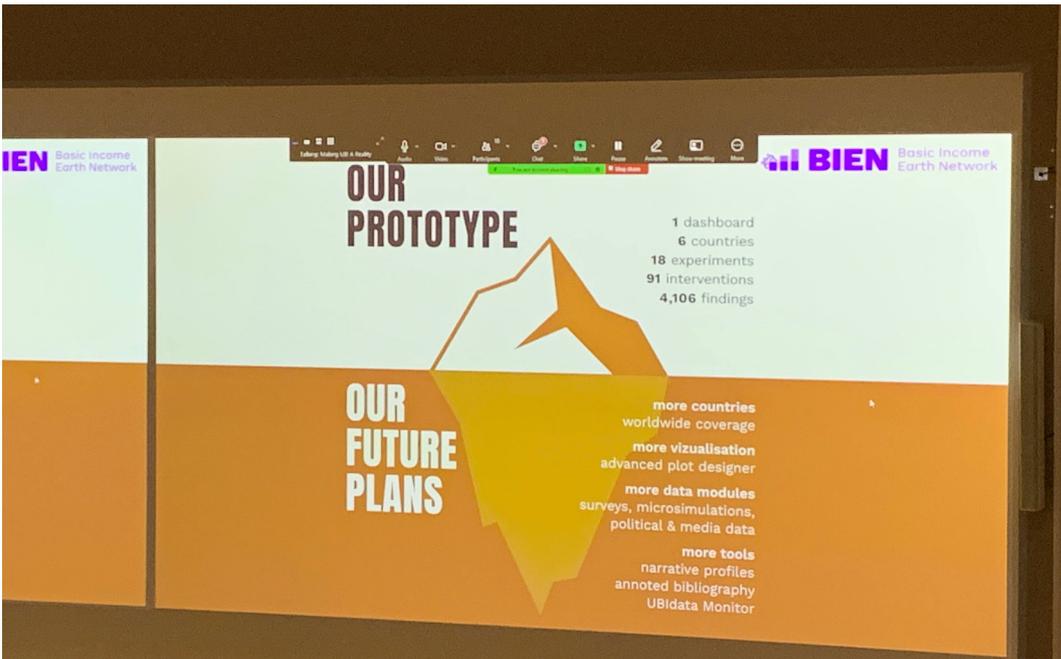
UBI Data 프로젝트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가 UBI Bath, 자율성 연구소Autonomy Institute, 공유지식Common Knowledge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이번 대회에서 처음 출시하였다. UBI Data의 목적은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토론을 이끌어내며, 기본소득 도입에 관심이 있는 정책가, 연구자,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을 위한 핵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실험, 설문조사 및 마이크로시뮬레이션, 정치 및 미디어 토론, 풀뿌리 조직과 네트워크의 발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는 프로토타입의 시작 단계에 있다.

8) <https://www.spi.net.za/a-decent-path-movie/>

9) <https://rafilm.se/outgrow-the-system>



UBI Data 발표 세션



현재 베타버전과 미래 계획

현재 공개된 베타 버전은 6개국에서 실시한 소수의 파일럿의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유용성과 사용자 경험을 소규모로 시연하여 테스트하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이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현 시범단계를 거쳐 전 세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정책, 제안 등에서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둔 온라인 지식저장소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https://ubidata.io>)에서 게시된 자료를 검토해보고 contact@ubidata.io으로 피드백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발표한 위르겐 Jurgен De Wispelaere 교수는

향후 전 세계의 자료를 수집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참여와 자금 지원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향후 UBI Data에 한국의 여러 정책 및 실험자료를 추가하는 방안도 한국네트워크 차원에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4. 브라질 마리카의 사례

브라질 마리카는 현재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3년에 처음 만들어져 여러 가지 설계과정을 거쳐 2019년 12월에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마리카 기본소득은 브라질 마리카 시(Brazilian city of Maricá)의 시민 93,000명에게 매월 무조건적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민기본소득(Renda Basica de Cidadania: RBC)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석유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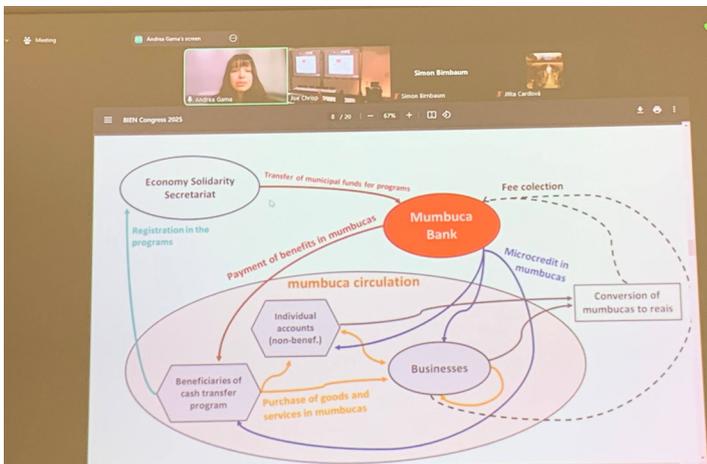
마리카에 거주하고 연방정부의 사회 프로그램 등록부(Cadastro Único)에 등록된 사람들은 마리카의 지역 디지털 화폐인 뭌부카(mumbucas)로 1인당 월 130레알(57미국 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았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지급액의 약 두 배 이상 상승한 300 뭌부카(127미국 달러)를 지원받았다. 2022년 5월에는 지급액이 200 뭌부카(US\$ 79)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2023년 마지막 3분기에는 개인 빈곤선의 105% 이상인 230 뭌부카(US\$ 84)로 인상되었다.¹⁰⁾

이에 더하여 도시에 ‘연대 경제(solidarity economy)’를 구축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렌다 바시카 데 시다니아 프로그램(Renda Básica de Cidadania)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지역 화폐를 관리하고 도시 주민과 중소기업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은행인 뭌부카(Banco Mumbuca)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및 저축 계좌, 사립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학비 지원, 도시 내 무료 대중교통 시스템, 원주민을 위한 추가 혜택, 비공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이체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영구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2017년 12월에 석유 로열티로 조성된 국부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1인당 빈곤선이 월 218레알(84미국 달러)인 브라질에서 마리카의 기본소득과 광범위한 연대경제 정책은 수만 명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뉴욕에 위치한 자인가족연구소(Jain Family Institute)와 브라질 연방 플루미넨세대학(Universidade Federal Fluminense)은 이번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마리카 시, 브라질 기본소득네트워크 및 전 세계 동료 학자들의 지원을 받아 형성된 국제 연구팀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을 결합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는 수혜자, 비수혜자, 커뮤니티 리더를 결합한 삼각측량 혼합방법 설계(triangulation mixed-methods design)를 통해 수행된다.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천 명의 주민을 대상으

10) <https://www.maricabasicincome.com/>



둘째 날, 마리카 세션

로 대면 정량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소비, 신
용접근성, 일자리, 소득, 신체적·심리적 웰빙,
자녀의 웰빙, 관계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다. 이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 기
간에 실시되었다. 둘째, 2020년 12월부터 화
상 회의를 통해 지역 사업자, 정책입안자, 정
치인 및 기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
화된 질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설문
조사 응답자 중 48명의 수혜자와 24명의 비
수혜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적인터뷰 실
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량조사에서 제기된 질
문에서 도출된 추가 조사와 함께 사회과학 전
반의 추가 질문을 탐구한다. 여기에는 (i) 후
견주의 clientelism, 부패, 권리, (ii) 금융적 포
섭과 공식 은행권 참여, (iii) 경제적 연대와
사회적 통화, (iv) 낙인, 존엄성, 정치적 주체
성, (v) 가족 및 성별 역학관계 등이 포함된
다. 또한 몼부카 화폐의 유통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마리카 기본소득 실현의 이면에는 보우
사 파밀리아 조건부 현금이전 프로그램 Bolsa Família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의 성공이 자리하고
있다.¹¹⁾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이 비록 가구 단위였고 조건부 현금 이전 정책이었지만 2004년 브라
질은 모든 국민(브라질에 5년 이상 거주한 모든 브라질 국민과 외국인)을 위한 권리로 ‘시민기본소득’을
법으로 명문화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물론 이때의 시민기본소득은 보편성이 충족된 개념은 아니며
예산 책정을 행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제도의 실현도 계속해서 지연되었지만, 기본소득을 받을 법적
권리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질 마리카의 정책은 이러한 법적 근거 속에
서 실현된 것이며 이후 마리카의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리카의 시민기본소득은 몼부카라는 지역화폐(현금)로 지급되며, 개별 단위의 무조건적이고 정기
적으로 지급된다. 또한 지급 수준도 빈곤선과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몼부카는 지

11) 보우사 파밀리아는 2004년에 형성되어 이후 몇 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수혜자 가구 수는 2004년 600만 가구에서 2024년 2천만 가
구 이상으로 증가했다(Secretaria de Comunicação Social, 2024). 이 프로그램의 결과, 노동 공급의 감소 없이 빈곤과 불평등 감소,
영양 및 건강 개선, 학교 출석률 증가 및 학업 실패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증거들이 존재한다(Campello e Neri, 2013; Silva, 2019;
Souza et al. 2019). 수혜자는 일련의 교육 및 건강 조건이 적용되었지만, 최근의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수급 조건의 엄격성이 완
화되었다. 2024년 이 프로그램은 소득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1인당 소득이 최대 218레알인 가구로 설정하였다. 수급액도 증가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가구당 190레알 수준이었지만, 개정된 프로그램에서는 각 가구가 최소 R\$ 600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출처: <https://www.maricabasicincome.com/en/about-the-study>).



지역화폐 Moeda Social Arariboia

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개인, 수혜자, 기업들은 뭉부카 은행에 등록하고 디지털 계좌를 개설한다. 기업은 뭉부카를 브라질 통용화폐(레알)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지만 수혜자는 이러한 권한이 제한된다. 뭉부카는 비아스 직불카드 또는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뭉부카를 통해 판매되는 것에 대해 2%의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는 뭉부카 기금으로 적립된다. 뭉부카의 목적은 마리카의 자금 순환을 유지하고 보유량의 1.8배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확보하여 승수 효과를 꾀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대 경제가 중심이 되는 뭉부카 지역화폐는 지역개발이 우선순위로 강조된다. 향후 정책의 효과 및 영향, 보편적 시민소득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8월, 제24차 BIEN 대회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 23차 BIEN 대회는 ‘기본소득과 사회-생태적 전환’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이 주제는 현재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 공동의 거주자로서 그리고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반드시 심도있게 고민하고 토론해야 의제가 되었다. 이번 대회는 60여개 이상의 세션이 열린 만큼 중심 주제를 놓고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자 만남의 장을 열어냈다.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은 BIEN이 “사회-생태적 전환의 필수요소이자 기후 정의의 핵심 요소로서의 기본소득” 선언에 공식적으로 지지서명을 했다는 점이다. 전 세계 39개 단체 및 이니셔티브, 47명의 학자와 활동가가 서명한 이 선언문은 로마 클럽에 전달되었으며, 향후 유엔 기구 및 대표들에게도 발송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네트워크를 포함한 기본소득지구 네트워크는 생태-사회적 전환으로서 기본소득에 방점을 두고 여러 활동과 연구들을 진척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생태-사회적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들이 내년 대회에서 이뤄지기를 바라며, 내년 대회에서는 한국의 여러 사례들에 대한 양질의 발표가 진행되기를 희망해본다.

대회장 이모저모(오른쪽부터 시계방향)

첫째 날, 로비에서의 장면

첫째 날, UBI Bath의 리더 Neil 박사

둘째 날, 버스워킹투어(제인오스틴 센터 앞)

둘째 날, 리셉션 저녁식사 모임

둘째 날, 버스 워킹 투어

셋째 날, 강남훈 명예이사장님 발표

추신 대부분의 사진은 필자가 촬영한 것이며 대회의 공식사진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asincome.org/news/2024/09/photos-from-all-three-days-of-the-2024-bien-congress/> 아쉽게도 현재 시점에서 대회의 영상 및 발표문 전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기본소득



9 772733 812007

ISSN 2733-8126

